

월간

다함께

2002년 11월 [18호]

반전 운동

가톨릭/개신교 비판

대선 전술 논쟁

브라질 대선 결과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





9월 28일 영국 런던에서는 30년 만에 최대 규모인 40만 명이 모여 반전 시위를 벌였다.

투쟁을 연결하기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전쟁 물이 세계를 더한층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부시가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10월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0월 17일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 이 사건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던 부시의 주장이 한낱 거짓말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줬다.

<다함께>는 1년 전에 가난과 절망 속에서 테러리즘이 자라남을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해 수천 명을 죽였다. 그리고 국제 경제 기구(WTO, IMF와 세계은행 등)를 내세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한 삶을 강요하고 있다. 굶주림과 치료 가능한 질병 때문에 어린이들이 죽어 가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만큼 체제는 비정하다. 이렇듯 매정한 체제가 쓰러진 절망을 낳았다.

그러나 부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쪽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다. 그는 발리 폭탄 테러를 근거 없이 “알카에다의 소행”이라고 미리 못박았다. 뒤이어 “이라크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성 정당의 대선 후보들 모두가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말해 뒀 하겠는가. 정몽준은 “의무병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은 “유엔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런 문제는 모호하게 남겨 두는 것도 필요하다”며 슬쩍 회피했다. 노무현은 지난해에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테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 국제적 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오직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만이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했다.

우리는 테러리즘과 기성 체제 정치인 모

두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십만 명이 반전 행진을 벌였던 영국·이탈리아·스페인의 거리에서 이것을 봤다. 또, 지난 3년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던 거대한 반자본주의 시위들에서도 볼 수 있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집단적이고 대중적인 반대, 오직 이것만이 불평등·불의·신자유주의·전쟁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에서도 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CMC 등 병원 노동자들이 다섯 달 가까이 정부의 공격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등 노동조건 개악에 반대해 노동자들이 정부에 도전할 태세다. 11월 10일 전국 노동자대회는 집단적 저항의 힘을 보여 준 것이다.

김대중과 기성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미국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어떤 전선이든지 간에 우리가 김대중과 보수 정치인들을 폐퇴시킬 수 있다면, 이들은 다른 전선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일에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보내야 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투쟁은 서로 연결돼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물음을 던진다. 왜 김대중과 보수 정치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는 데는 수억 달러씩 지원하면서도 임금, 작업 조건, 노동할 권리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인색한가?

우리 함께 김대중과 보수 정치인들의 정권 나간 우선순위에 도전하자.

목차

- 3 편집자 머리말
- 4 지금 세상은
- 6 인도네시아 폭탄 테러
- 7 미국 정부 각료 폭로
- 8 미국의 반전 운동
- 10 반전 운동의 성공을 위한 주장
- 12 유엔의 추악한 역사
- 14 브라질 대선 결과
- 16 가톨릭 / 개신교 비판
- 24 민주노동당 선거 강령
- 26 김승국 반전 연설
- 28 사회당 대선 전술 비판
- 30 개혁통합 노동연대 비판
- 31 개혁국민정당 비판
- 32 독일 총선 결과
- 35 독자 편지
- 36 서평

**“다함께”에 가입하시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3296-4773

Fax : 02-968-5907

E-mail : altogether2002@yccs.co.kr

<http://altogetherjinbo.net>

독자 편지, 투쟁 소식/보고 등을 보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11월 13일입니다.

E-mail : altogetheredit@yccs.co.kr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

지난 9월 정부는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공무원조합'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 체결권이 빠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 법안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단체들과 연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독소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한 마디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월 12일에 열린 정부 차관 회의에서 노동조합법에 '공무원조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내세우며 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공무원 노조를 지지하고 있다. 2002년 9월 한길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0.3퍼센트가 공무원 노조 결성을 찬성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한 1998년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또,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한 김대중의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외면한채 탄압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뒤 총 9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 6만 5천 명으로 출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출범 뒤 꾸준히 조합원들이 늘어 현재 공무원 노동자 8만여 명이 가입해 있다.

지난 9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기 위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11월 4일과 5일 서울에 모여 파업 집회를 열 예정이다. 비록 이틀간 연차휴가를 활용한 파업이지만, 올해 출범한 신생 노조가 연가파업을 결의한 것은 공무원 노조의 활력을 보여 준다.

공길숙(전 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부장)

기독교 방송 쟁의

막가파 목사의 복귀를 잠시 막아내다

기독교방송(CBS) 제단 이사회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11개 교단의 목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국가 대표급이다.

기독교방송은 1994년 이래 주파수가 세 배나 늘었다. 라디오에서 시작해 위성·유선 방송에까지 진출했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들을 1백80여 명이나 감원했다.

사장이자 목사인 권호경은 1999년 한 해에만 관공비를 1억 6천7백만 원이나 썼다. 그런데도 1995년 이래 노동자들의 수당은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임금 체불도 밥먹듯 해 2000년에 체불 임금이 24억 원에 달했다.

권호경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1999년에 기자·PD를 무려 23명이나 해고했다. 2000년에는 "노동자 편을 든다"는 이유로 방송 진행자까지 해임했다. 용역 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습격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군부 독재 시절에 일부 목사들이 그랬듯 권호경도 "민주 목사"였다. 1973년에 남산 부활절 "내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옥고도 치렀다.

그러나 1989년 이래 "민주 목사" 대부분은 기독교 각 기관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달라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서회·기독교방송을 장악한 이들 교단 정치가들은 "종로5가 마피아"라고 불린다.

이들은 권력과 야합해 각종 청탁과 부패를 일삼았다. 권호경이 김영삼·김대중에게 보낸 이른바 "충성 편지"는 낮뜨거운 찬사로 가득 차 있다. 권호경은 "김영삼 각하께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 주신 새 역사 창조에 노고가 많다." 하고 찬양했다.

지난해 기독교방송 노동자들은 2백 65일간 파업을 벌여 권호경을 쫓아냈다. 그러나 권호경은 여전히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9월 30일 제단 이사회가 열려 권호경을 다시 사장으로 선출하려 했다.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이사 18명 중 6명이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억압자의 복귀를 잠시 막아 낸 승리였다.

김태훈

가톨릭과 정부의 핍박에 저항하는 CMC 노동자들

“교회는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돼야 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대주교의 지난 1999년 성탄절 메시지다.

그러나 2002년 10월 17일 현재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서는 정진석 대주교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CMC) 노동자 6백여 명이 1백48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차수련 위원장과 30여 명의 조합원이 “가톨릭의 자성과 파업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9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 6명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가톨릭 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당측에 정진석 주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관용을 베풀 수는 있지만 타협할 수 없다”며 명동성당에서 천막을 칠거라는 일곱 번의 공문이었다. 명동성당측은 단식 노조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화장실을 폐쇄했다.

10월 6일 가톨릭은 병원측이 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글을 주보에 끼워 신자들에게 나눠 주며 파업을 매도했다. 또, 명동성당 백남용 주임 신부는 미사 설교에서 “병원 간호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내가 받는 봉급의 두 배인 1백50만 원을 받는다. 저들은 이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CMC 노동자들의 초봉은 65만~75만 원에 불과하다. 주휴도 없이 하루 10시간씩 세탁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고작 59만 원이다.

강남성모병원 관리자들은 파업중인 노동자가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자 “복귀 시한(9월 25일)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직원이 아니다”며, 경찰에게 “이 사람 조합원이예요.” 하고 알려 주면서 잡아가라고 요청

하기까지 했다.

강남성모병원 집회에는 9월 11일 경찰력 투입 때보다 많은 17대의 전경 버스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병원 진입을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 9월 18일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조합원 한 명이 실신하고 7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9월 25일에도 후문으로 이동하는 조합원을 밀어붙여 여성 조합원이 실신하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다. 또, 경찰은 연행한 조합원에게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이런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물병으로 경찰을 치려 했다는 이유로 연행했다.

또, 연대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기 위



해 CMC 노조에 연대하던 서울 현대아산병원 지부장과 한양대병원 조직부장 등을 구속했다.

9월 30일 경찰은 9·11 경찰 침탈 때 연행한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하지 않으면 10월 2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CMC 노동자들은 가톨릭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고 있다.

매일 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에 “출근 투쟁”을 한다. 일요일에는 성당들에서 주보에 끼워 넣은 병원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유인물을 신자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 10월 14일부터 시작한 주교단 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보건의료 각 부와 토론회·집회 등에 참석해 CMC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다.

10월 21일에는 항의 농성단 10명이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탈리아 노동조합과 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농성을 무기한 진 행하기로 했다.

1백50여 일 동안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해 조합원 대부분이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심지어 점심을 거르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15명 체포 영장 발부, 93명 출두 요구서, 10명 불구속 기소, 15억 원 — 임금과 조합비 — 가압류, 20명 해고, 5백73명 징계위원회 회부, 4개월치 무노동무임금 적용, 경찰 병력 투입하여 2백41명 연행, 7명 구속, 집단적인 노조 탈퇴 공작 등 정부는 계속 탄압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굴하지 않고 있다.

CMC 투쟁에 대한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 노동자들은 집회에서 8백만 원이 넘는 지지금을 모금해 주었다. 10월 16일 보건의료 산별 총력 파

업에는 5천 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CMC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연대는 가톨릭 내에서 새로운 압력을 낳았다. 10월 11일에 평신도들이 1천 인 선언 등을 통해 “의료원은 대화와 협상에 적극 임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각 성당에서도 신자들이 CMC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가톨릭은 그 동안 노동자들에게 피신처, 중재자, 중립적인 곳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CMC 노동자들의 투쟁은 가톨릭 보수주의의 본질을 드러내 주었다.

김용석

발리 폭탄 테러의 배경

해외 좌파 저널에서

인도네시아에는 서방 정부들과 대기업들을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 비극이게도, 그들 중 일부가 평범한 관광객들을 겨냥해 끔찍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분노를 터뜨린 듯하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인구가 많고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1997년 아시아를 휩쓴 거대한 금융 위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붕괴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굶주림에 시달렸다. 화폐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외채를 갚을 수 없었다.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1998년 시위대가 의회를 점거하고 군대와 충돌한 끝에 독재자 수하르토 장군을 권좌에서 몰아냈다.

아직도 비참한 가난에 허덕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다. 현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가 국제 통화기금(IMF)이 지지하는 긴축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는 아체 지역이 그런 사례다. 그런 탄압은 1999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다가 압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동티모르를 떠난 뒤로 더욱 강화됐다.

10월 12일 발리 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언론 매체들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주의 조직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의 압도 다수가 무슬림이다.

서방 제국주의의 억압과 그로 인한 빈곤에 직면한 사람들은 종교에 기대어 희망을 찾으려 했다. 네덜란드는 17~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면서 야만적으로 통치했다. 서방은 1960년대에 좌파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슬람주의 조직들을 부추기고 지원했다. 지금 주요 이슬람주의 조직들의 다수는 정부와 협력하면서 IMF가 강요하는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통령 [통일개발당의 합자 하즈]은 주요 이슬람주의 정당의 지도자다.

그러나 일부 이슬람주의 조직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빈곤이 지속되는 데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개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들을 겨냥해 공격을 퍼부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주의 조직들이 기독교도들을 표적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발리 폭탄 공격의 배후에 그런 조직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망한 관광객의 다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우파 총리 존 하워드스는 폭탄 공격이 자아낸 공포를 이용하려 한다. 그는 인권을 애기한다. 그러나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난민들을 태운 배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그런 난민들을 끔찍한 수용소에 가두기도 한 자다. 그는 또한 미국·영국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기업들은 그 지역의 석유와 광물 자원을 나눠 갖는 주요 당사자들이다. 하워드스는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지 W 부시가 밀어붙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발리 폭탄 공격이 그런 목적에 이용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다.

그것은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고 주요 서방 열강들에 대한 분노를 더욱 자극할 것이며 그런 분노의 일부가 또 다른 테러 공격의 형태로 되돌아올 것이다. 

부시는 이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농무 장관 앤 비너먼		비너먼이 이사로 봉직한 캘진(Calgene)은 유전공학 처리 식품 플레이버-세이버(Flavr Savr) 토마토를 슈퍼마켓에서 처음 판매했던 회사다.
법무 장관 존 애슈크로프트		애슈크로프트는 셰링-플라우(Schering-Plough)가 엄청난 이익을 뽑아올린 알레르기 치료제 클라리틴(Charitin)의 특허권을 연장하는 법안에 찬성한 극소수 상원의원 중 한 명이다.
상무 장관 돈 에반스		에반스는 미국의 해안을 관리하는 국립해양대기관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을 감독한다.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의 4분의 1이 NOAA가 관리하는 해안에서 채굴된다.
국방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1999년 군수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했다. 당시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사이던 럼스펠드는 1천1백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에너지 장관 스펜서 에이브러햄		2000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에이브러햄은 당시 제너럴 모터스, 포드, 리어(Lear Corp.) 같은 회사에서 7만 2천 달러를 받는 등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정치 현금을 받았다.
보건후생 장관 토미 톰슨		톰슨은 거대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의 주식을 처분했지만, 1993~2000년 주주사채직 당시 필립 모리스에서 7만 2천 달러가 넘는 정치 현금을 받았다.
내무 장관 게일 노튼		노튼은 국립공원과 국공유지를 관리한다. 그는 포드와 비피 아모코(BP Amoco)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화당환경보호연합(Coalition of Republican Environmental Advocates) 의장이다.
노동부 장관 일레인 차오		차오는 다섯 회사— 돌 푸드, 클로록스, 생명공학 기업 CR 바드와 HCA,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사진을 차지하고 있다.
국무 장관 콜린 파월		AOL과 타임 위너가 합병했을 때, 파월의 주식 지분은 4백만 달러 상승했다. 그의 아들 마이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반대한 유일한 통신위원이었다.
운수 장관 노먼 미네타		하원 운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부시 내각에서 유일한 민주당원이다.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보잉 등이 그에게 선거 자금을 뒀다.
재무 장관 폴 오닐		오늘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와의 회장이었다. 알코아를 위해 대정부 로비를 하고 있는 빈슨 앤 엘킨스(Vinson & Elkins)는 부시에게 세 번째로 많은 정치 자금을 바치는 회사다.
원호 장관 앤터니 프린시피		프린시피는 통신 회사 페더럴 네트워크의 회장이었다. 그는 또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통합 솔루션 담당 이사이었고 QTC 메디컬의 사장이기도 했다.
백악관 비서실장 앤드루 카드		카드가 백악관 비서실장에 취임하기 며칠 전에 제너럴 모터스는 그동안 주요 로비스트로 활동한 카드를 위해 케네디 센터 옥상에서 정성껏 송별 파티를 열어 주었다.
예산관리국장 미치 대니얼스		제약회사 엘리 릴리의 수석 부회장을 지낸 대니얼스는 대통령 부시가 메디케어(Medicare: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제도)에 약값 지원을 추가하는 계획에 가격 통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		13만 톤짜리 유조선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물어 보면 알 수 있다. 셰브론 이사회는 그에게 이처럼 이상한 상을 수여했다.

출처: The Center of Responsive Politics(opensecrets.org)



두 개의 미국이 있다

사라 장
미국 시카고 지역
반전위원회 활동가

지난해 9·11 테러 사건 뒤 미국 정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는 핑계로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월 7일로 1주기를 맞았다. 미국이 1년 동안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

1년 동안 1만 톤이 넘는 폭탄이 떨어져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학살당했다. 미국의 폭두각시 하미드 카르자이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미국 가스 회사 유노칼이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들어왔다. 영국의 <가디언> 기자 조너선 스틸은 2만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폭탄 투하의 간접 결과인 굶주림·추위·질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술 더 떠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부시 독트린”을 발표했다. 기본 내용은 미국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핵무기까지 이용해 다른 국가의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 적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적 경쟁 세력을 예방할 수 있는 권리, 미국의 경제·군사 정책을 완전히 결합시켜 미국 자본이 군사력 우위를 등에 업고 원활한 시장 확대를 꾀할 권리를 주장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과 오만은 전 세계에서 분노를 사고 있다. 9월 28일 런던에서 열린 반전 집회는 영국 역사상 30년 만에 40만 명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런던 시위가 있는 바로 다음 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0만 명이 모인 반전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많은 언론 매체들은 마치 모든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보복전”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많은 미국인들이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전쟁의 구실로 내세우곤 한다. 갤럽 여론 조사를 보면, 아직도 미국인 53퍼센트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론 조사는 아주 왜곡돼 있다. 이 여론 조사의 질문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많은 이라크 민간인이 죽을지, 미국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세금을 쓸 것인지, 전쟁을 시작하면 미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름값 인상 등은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는다. 그 질문들은 “당신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든가, 미국인에게 9·11 테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라크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대량 살상 무기”로 미국을 공격한



다고 가정할 채 던지는 질문들이다.

미국 정부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월 6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는 미국 노동자 계급의 반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시위를 조직한 “낮 인 아워 네임”은 “투쟁 선언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미국 정부가 우리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불의에 저항할 책임이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 것을 맹세한다.”

이 시위는 미국 전역의 36개 도시에서 10만 명을 동원하는 쾌거를 낳았다. 9·11 공격이 있는 뉴욕에서만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전 시위에 모였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전 시위에 참가했다.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각각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 외에도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3천 명, 샌디에고에서 7백50명, 부시의 고향인 텍사스 주의 오스틴에서도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알바니와 필라델피아의 시위대들은 그 지역 상원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하다가 모두 구속됐다. 시카고 시위에 참가한 3천 명의 노동

자와 학생들은 “엑손모빌 ·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 쉘 [이 셋 모두가 석유 회사들] 너희들, 전쟁할 거면 지옥에나 가라!”, “헤이 부시, 우리는 너를 안다. 네 아버지도 살인자였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가장 인기있던 구호는 “위싱턴의 정권 교체!!”였다. 이 구호는 부시가 주장하는 “이라크의 정권 교체”를 비꼬는 구호로 일요일 시위에서 각광을 받았다.(다른 구호로는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없다”, “아모코를 위해 전장에 나가 살인하지 않겠다”, “부시의 인종 차별적 전쟁을 중단시키라” 등이 있었다.)

반전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시의 전쟁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 타임스> 10월 7일치 전면에 실린 여론 조사는 미국 노동자 계급의 요구들이 피에 굶주린 전쟁광 부시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여론 조사에 참가한 미국인 대다수는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도 정치인들이 이라크 전쟁에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선거 후보자들에게 이라크 전쟁의 가능성을 듣고 싶은가 아니면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듣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70퍼센트가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대답했다. 단 17퍼센트만이 전쟁에 대해 듣고 싶다고 대답했다.

부시는 국외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한편, 국내에서 노동자 계급을 겨냥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을 핑계로 이슬람 교도와 중동 출신 노동자와 학생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부 지역 항만 노동자 파업을 미국판 노동악법 태프트-하틀리 법을 이용해 공격했다.

서부 항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로운 기계 도입으로 일어날 대량 해고에 반대해 노동자들이 태업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1999년 이후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을 만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해 왔다. 항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사장은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포틀랜드의 반전 시위대는 항만 노동자 파업에 연대해,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지나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모두 나와 반전 시위대

를 지지했다. 이것은 조직 노동자 계급이 반전 운동에 참가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조직 노동자 계급 운동과 반전 운동의 결합, 9·11 사태 뒤 거의 사라졌다가 얼마 전 워싱턴에서 다시 시작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반대하는 운동과 반전 운동의 결합은 반전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이다. 미국 노동총연맹(AFL-CIO)은 아직도 부시의 테러 전쟁에 파란불을 켜 주고 있지만 지역 단위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월 10일 의회는 부시의 무력 사용안을 승인했다. 이번 의회 승인은 미국 정치인들의 처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 이 안은 2백96대 1백33으로 통과됐다. 부시의 전쟁을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부시의 무력 사용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파인 양 떠돌아 대던 다수와 지도자인 민주당 상원의원 톰 대슬도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후세인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기 위한 것임을 전 세계를 향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하고 부시와 똑같이 말했다. 1991년 걸프전에 반대한 민주당 상원의원 딕 게파르도 이미 부시의 전쟁 준비팀에 가담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전쟁광들의 전쟁 계획에 맞서 미국의 노동자와 학생들은 오는 10월 26일 워싱턴에서 전국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http://www.nowaroniraq.org>, <http://www.nowarnoway.org>, <http://www.noiraqattack.org>)

지난 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10만 명 규모의 반전 집회들을 볼 때 10월 26일에 있을 전국 집회는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미국 정부의 전쟁에 반대하는 워싱턴 시위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미국 지배자들과 반대다. 미국 노동자들과 세계 노동자 계급의 연대 투쟁만이 미국의 피비린내나는 제국주의 전쟁을 멈추게 할 실질적인 대안이다. 

반전 운동의 성공을 위한 주장

이수현

지금 전 세계 반전 운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는 40만 명이 참가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1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도 10만 명이 반전 시위를 벌였다. 이런 반전 시위와 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 같다.

그러나 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동 내부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종파주의는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중요한 정치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를 흐려 버리거나 회피해서도 안 된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반자본주의 운동을 건설한 프랑스 좌파들은 작년 9·11 사태 뒤에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생각의 혼란 때문에 대중적인 반전 운동을 건설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반동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미국 제국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 양비론적 태도를 취했다.

<한겨레 21> 425호에서 “9·11 테러는 이익과 권력의 독점을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제국 중심부의 가학성과 그 대항 과정에서 제국에 의해 정신적으로 유린당한 주변부의 피해망상증이 충돌한 결과”라고 주장한 <당대비평> 편집위원 권혁범 교수의 태도도 마찬가지 양비론이다.

이런 양비론적 태도로는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반동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2백여 년 동안 중동을 억압하고 지배해 온 서방 제국주의에 맞선 반제 저항 운동의 표출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억압자의 폭력과 피억압자의 해방을 향한 몸부림을 똑같이 비난할 수는 없다. 이 점을 강조한 영국의 전쟁중지연합은 유력한 이슬람 단체들과 활동가들을 반전 운동에 끌어들었고 이번에 4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다.

양비론

또, 평화주의 문제도 있다. 물론 우리는 위선과 기만에 불과한 지배자들의 ‘평화주의’와 보통 사람들의 평화 애호 정신을 구분한다. 지배자들은 “테러”나 “폭력 시위”를 비난하면서 늘 평화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국가라는 억압 기구를

통해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 또, 그들 자신이 폭력을 사용할 때는 태도가 돌변한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도 서해 교전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위해 북한 병사들을 많이 죽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지배자들도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장 강도가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남의 물건을 강탈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이와 달리 보통 사람들의 “평화주의”는 그 열망이나 이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들의 염원과 소망을 심분 공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공통의 기초 위에서 아주 우호적이지만 날카롭게 그들의 비현실성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에서 평화주의는 모든 생명을 신성한 것이라며 일체의 폭력을 거부한다. 그래서 “합리적 이성” 같은 추상적·절대적 도덕에 호소하고 계급 투쟁이 아니라 인류에 호소한다. 예컨대, 1980년대 영국 반핵군축운동(CND)을 주도했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E P 톰슨은 핵무기가 계급 이익과 무관하게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핵무기는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낳는 체제를 없애기 위한 계급 투쟁을 고무할 것이 아니라 사회 최상층부터 밑바닥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 대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류 자체가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 집단, 즉 계급으로 분열해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인류에 호소하는 것은 결국 양대 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집단, 즉 중간 계급에게 호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간 계급이야말로 평화주의의 진정한 계급적 기반이다.

또, 합리성이 판단의 기준이라면, 자본주의는 옛날에 사라졌을 것이다. 자동차가 너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반면, 정작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남아도는 차를 보면서 한숨을 쉴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다.

평화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수단이 노동자



연대를 해치지 않는 한은 목적 — 계급 억압 · 전쟁 · 불의가 없는 사회 — 이 수단 — 피착취 · 피억압 계급의 대중 행동(어쩔 수 없이 폭력의 사용이 포함되곤 하는) — 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폭력이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예컨대 미국의 남북 전쟁, 베트남 전쟁).

또,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폭력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타락시킨다고 주장한다 (“우리 안의 파시즘”). 그러나 도망친 노예를 잡기 위한 노예 주인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오히려 정당하다. 끊임없는 억압에 맞서서 끈질기게 저항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피억압 대중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

반자본주의와 반전

작년에 9·11 테러가 터지자 미국의 반자본주의 운동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둘러싸고 분열했다. 조합원 수만 명을 시애틀 시위에 동원한 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비정부기구(NGO)들도 대개 부시가 벌이는 전쟁에 침묵했다. NGO와 노조 지도자들은 반자본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이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전쟁이 이 체제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에서 약간 이탈한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위대한 군사 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전쟁은 다른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그리고 “정치는 응축된 경제”다. 오늘날의 전쟁은 국가와 결합된 자본의 경쟁이 격화돼 국민국가 간 군사적 충돌로 폭발한 것이다. 부시의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적 표현”인 셈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전 “평화 시기”를 그리워하며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1871년부터 1914년까지 ‘평화적’ 시기도 주요 국가의 국민 대다수, 식민지와 후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정

한 평화가 아니라 착취 · 억압 · 고통 · 공포로 점철된 시기였다.

당시 소수 열강들이 전 세계를 분할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제국주의라고 불렀다. 오늘날 IMF는 그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이런 경제적 무기는 군사적 무기와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

반전운동

작년 9·11 이후 우리는 한국에서도 반전 운동을 건설했다. 그러나 대규모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프랑스의 반전 운동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인, 즉 좌파의 정치적 약점 때문이다. 남한 내 최대 좌파인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시야가 좁게 한바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반미 투쟁을 통일 운동에 종속시키려는 전략이 커다란 문제다.

대학생 총궐기 대회 준비 과정에서 한총련은 “이라크” 전쟁을 쟁점에서 제외하려 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대화국면에서 대중적인 반미 투쟁은 화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살 항의 투쟁에 소극적이었다. 민족주의 시각으로는 반미 · 반제국주의 투쟁을 일관되게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었다.

‘전쟁반대 · 평화실현 공동실천’에 속한 일부 좌파나 시민사회단체들의 평화주의적 또는 양비론적 태도 역시 대규모 반전 운동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모든 국가간 폭력에 반대한다”거나 “전쟁도 나쁘지만 테러도 나쁘다”는 식의 “공평 무사한” 태도로는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없다. 일부 단체들은 지난 10월 8일 반전 행동도 “테러리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행사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반전 행동 사전 준비 모임에 줄곧 참석하다가 행사 전날 돌연 독자적인 기자회견을 감행한 민중연대의 엘리트주의 같은 행태 역시 우리 운동 내의 정치적 신의를 깨뜨려 반전 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힘들게 한다.

시민 단체들 사이의 최대 쟁점은 반전 운동에 “반미”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그러나 지금 남한의 반미 감정이 드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전 운동에 반미를 결합시키는 것이 분명히 운동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전 운동 내부의 이런 토론과 논쟁은 궁극적으로 노동자 대중 운동과 만나야 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베트남 반전 운동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1963~64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10만 명씩 참가한 대규모 시위는 1967~68년에야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반전 운동이 다른 쟁점들과 연결된 계 계기였다.

예컨대 1968년 프랑스 학생 운동은 1천만 노동자 총파업과 만났고, 이탈리아에서 1967~1968년의 학생 운동은 1969년의 노동자 투쟁(“뜨거운 가을”)으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은 각국에서 되풀이됐고 1974~1975년의 포르투갈 혁명까지 지속됐다. 미국의 베트남 반전 운동은 인종 차별에 맞선 흑인들의 저항과 결합됐다. 반전 운동과 흑인 항쟁의 결합이야말로 베트남 주둔 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미국 지배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요인이었다.

지금 영국의 반전 운동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에 좌파들이 진출하고 있고, 영국 노총(TUC) 총회에서는 반전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10월 31일 또 한번 대규모 반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물론 우리 나라 노동계급 의식의 전반적인 수준이 의회나 선거 또는 기성 정당들의 부패 등 협소한 정치 쟁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전 운동과 조직 노동자 운동이 단기간에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 “현실의 한 스텝, 한 스텝”(엥겔스) 밟기를 포기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쩌면 아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미래의 집을 지금 지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집을 위해 벽돌을 쌓을 수는 있다. 



한상원

유엔의 추악한 역사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전에 유엔 무기 사찰단이 무기사찰에 돌입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

이런 생각들은 유엔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적 기구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유엔의 창설

유엔 출범은 1941년 미국 국무부에서 계획했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 뒤 세계 분할에 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중이었고 전후 자신의 세계 지배력을 위협할 만한 전쟁은 막는 것이 유리했다. 또,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기구에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세계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싶었다.

당시 세계 패권을 좌우하던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에 포함되고 여기에 빠진 다른 나라들은 총회 회원국으로 인정됐다. 초창기 회원국들은 모두 미국에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즉, 추축국가들(이탈리아·독일·일본)에 맞서 싸워야만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남미 국가들은 유엔 회원국이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런 노력 끝에 미국은 유엔을 만들고 조종할 수 있었다. “종전 후 새로운 세계 평화의 정착”을 떠들어대면서 말이다.

그러나 유엔이 출범하자마자 세계는 냉전에 돌입했고 평화의 꿈은 사라져 버렸다. 냉전 기간 동안 양대 진영은 치열한 군비 경쟁을 했다. 주변부 국가들은 대부분 끔찍한 전쟁과 약탈을 겪어야 했다. 1945년부터 1989년까지 1백38건의 전쟁이 일어났고 2천3백만 명이 죽었다. 모두 제3세계에서 일어난 전쟁들이었다.

이 시기 미국은 한국 전쟁을 벌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그레나다, 파나마 등을 침공했다. 구 소련도 헝가리, 체코, 아프가니스탄 등을 침공했다.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야만적인 전쟁을 벌였다. 영국은 1953년 케냐의 마우마우 봉기 당시 수많은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고문했다. 프랑스는 알제리와 인도차이나

를 계속 식민지로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했다.

1948년 유엔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인정했다. 그 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총 네 차례나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아직도 일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1975년, 포르투갈 군대가 철수한 동티모르에 인도네시아가 개입해 20만 명의 동티모르인들이 학살당했다. 유엔은 이 학살을 지켜만 봤다.

한편, 이 시기에 유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항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2차세계대전 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해 유엔 회원국이 됐다. (1961년에만 회원국 수가 51개에서 1백 개로 늘어났다.) 그러자 유엔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엔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미국은 당황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61년부터 유엔 안보리만이 모든 유엔 군사 행동을 허가하는 권한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 같은 이유로 미국과 구 소련은 1980년대 중반 유엔 재정 지원을 철회했으며 이 때문에 유엔은 재정 위기를 겪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강대국은 유엔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인도주의적 개입’

냉전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엔이 평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되자마자 유엔이 한 짓은 미국이 벌인 제2차 걸프전(1991년 1~2월)을 승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고 이란 병사들에게 독가스를 살포했을 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유엔 안보리는 1990년 11월 30일 후세인에 맞선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다. 중국이 기권했을 뿐 모든 나라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는 소련에 감사의 선물로 10억 달러어치의 식량을 기부했다. 또, 중국에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천안문 학살 뒤 세운 대화 거절 방침을 철회했다.

이라크 전쟁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됐다. 이것은 냉전 뒤 미국이 군사 개입을 벌일 때 꼭 써먹는 수법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인도주

의적 개입'은 수십만 명을 폭격과 경제 제재로 학살하는 것을 뜻했다.

제2차 걸프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자신감에 넘쳐 '인도주의적 개입'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게 보여 주고 싶었다. 1992년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희망 회복'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국제 '평화유지군'의 목적은 내전을 종식하고 민간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은 평화가 아닌 증오를 소말리아인들에게 심어 줬다. 가장 악랄한 것은 역시 미군이었다. 한 미군 병사는 소말리아 소년이 자신의 선글라스를 훔쳤다는 이유로 소년을 쏘 죽였다. 그 벌은 고작 한달 월급 반납과 지위 강등뿐이었다.

처음 미군은 소말리아국민동맹의 지도자 무하마드 파라 아이디드와 친교를 맺었다. 그러나 한 군벌 집단이 키스마요를 침공해 아이디드를 몰아낼 때 미군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런 미군의 이중적 태도에 분개한 소말리아인들이 모가디슈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미군은 시위대에 발포했다. 반(反) 아이디드로 태도를 바꾼 미군은 아이디드의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 폭격을 가했다. 또, 아이디드가 숨어 있을 거라며 모가디슈 병원에 미사일을 비 퍼붓듯 쏘아댔다.

미군 말고 다른 평화유지군도 마찬가지로 폭력적이었다. 벨기에 군인들이 한 소년을 두들겨 패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탈리아 군대는 난민촌을 약탈했고 한 말레이시아 출신 대원은 병원 노동자를 구타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군대는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에 발포했다. 이런 만행 때문에 소말리아인들은 유엔군을 내쫓기 위한 내전을 치렀다.

1995년 11월 데이턴 평화협정이 체결돼 30만 명의 보스니아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보스니아 내전이 끝났다. 이 협정을 증제한 것은 미국이었다. 이것은 강압에 의한 협정이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에 따르면 미국은 "대표단이 협상에 서명할 때까지 수 주일 동안 그들을 미국 중부 깊은 곳에 사실상 감금"했다.

평화협정 뒤 유엔이 임명한 고등판무관이 보스니아를 위임 통치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을 외피로 삼은 효과적인 식민 지배인 셈이다. 유엔고등판무관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선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사퇴시키고, 정부

각료로 당선한 보스니아인들 중 비협조적인 인사들을 해임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 자리는 모두 임명된 외국인들이 차지했다. 예컨대 중앙 은행장은 뉴질랜드인이었으며, 경찰 부대표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서 일하던 악명이 자자한 미국인이었다. 유엔은 보스니아에 평화가 아니라 독재 정부를 수립했다.

2002년 이라크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프랑스가 제시한 '2단계 해법'을 수용함으로써 이견을 좁히는 듯하다. '2단계 해법'은 전쟁을 방지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이라크에 이해관계가 있다.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의 말대로 "프랑스와 러시아의 석유 기업들은 이라크에 이해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던 나라들이 이라크의 막대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뒷거래를 벌이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막을 것이라 믿는 것은 환상이다.

한편,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이라크 공격 결의안은 미국이 유엔의 동의 없이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미 미국은 1999년 발칸 전쟁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도 유엔 없이 전쟁을 완수했다. 이 때 유엔은 전쟁을 막는 데 완전히 무기력했다.

유엔이 전쟁을 막은 역사는 없다. 전쟁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쟁을 축복해 주거나 아니면 있으나만 한 게 유엔의 역사다. 유엔이 아닌 대중적 반전 투쟁만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막을 수 있다. 

1992년 소말리아에 파병된 UN '평화유지군'의 만행에 항의하는 소말리아인들

외채가 아니라 삶이 먼저다

해외 좌파 저널에서

지난 10월 6일 브라질에서는 약 1억 1천5백만 명이 새 대통령과 연방·지방의회 의원을 뽑기 위해 투표했다. 브라질 노동자당(PT) 대통령 후보 룰라가 46.44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1등을 했다.

후보 네 명 모두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1백만 당원을 가진 PT야말로 노동조합이나 대중 운동과 밀접한 연계를 지닌 유일한 정치 세력이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와 IMF는 PT의 승리를 크게 우려했다. 룰라가 최근 외채 상환을 늘리라는 IMF 지시에 동의했음에도 국제 금융계는 그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브라질에 대한 IMF의 영향력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PT가 승리하면 현 대통령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주의 친기업 정책이 바뀌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카르도주 집권 8년 동안 전면적인 사기업화, 대량 실업,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그런데 PT 정부도 카르도주의 "평상" 정책[위급한 사태에 직면해서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일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스런 조짐들이 많다.

PT는 여전히 사회주의 정당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점차 선거에 집착하는 관료 정당으로 변모해 왔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브라질]의 사회·경제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바로 지금, PT의 이러한 정치적 우경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연방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에 관한 통계

수치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경제활동인구 6천2백만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실업자이거나 월 70달러(약 8만 원)인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한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정도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소득 불균형이 심한 국가다. 국가 교육과 보건 의료 체계가 파산해 고통을 겪고 있고, 폭력도 끔찍하게 높은 수준이다.

1차 투표에서 룰라가 최다 득표를 얻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현실에서 PT가 신자유주의에 도전하기보다는 그것과 협상하는 쪽을 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최근 선거 운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경제면에서 PT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온건한 거시경제 정책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정책은 카르도주가 채택했다가 재앙적인 결과를 낳은 바 있다. 사기업화한 산업체의 재국유화나 거대 자본에 대한 통제 정책은 PT의 창고에 처박혀 있다. PT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부추기는 데 더욱 열심이다.

국가 측면에서 PT는 참여 예산제, 협동조합, 인민은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개혁은 지지할 만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자본주의의 경제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내 시장에 의존해서는 IMF와 세계은행의 후원을 받는 강력한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수중에 집중된 막강한 권력에 도전할 수 없다.

엄청나게 많은 외채가 사회·경제적 투자를 질식시키고 있다. 2000년에 무토지농민운동(MST)이 조직한 국민투표에서 5백만 브라질 사람들이 외채 상환 거부를 승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02년 9월 첫주에 있는 국민투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에도 PT 지도부는 그 운동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PT의 투사들이 그 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한때 외채 지급 중단을 지지하던 PT는 이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 운동을 ‘표현하는’ 정당으로 출범한 PT는 이제 그 토대와 꽤 멀리 떨어져 있다. 최근 주류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지적하듯이, “PT는 전문화되고 성장하면서 사회 운동을 내던지고 있다.” 당 지도자들은 말로는 운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토지와 건물을 점거하는 MST의 전투적인 운동 때문에 PT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일 중 하나는 PT가 자유당(PL)과 동맹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던 PT가 이제는 우파 정당과 선거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룰라의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주제 알렌카르는 자유당 당수이자 유명한 섬유 재벌이다. 알렌카르가 소유한 공장의 노조 위원장인 알베르토 마르티아나노는 이렇게 말했다. “룰라가 주제 알렌카르와 함께 공장에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룰라가 지금 사장과 뭐하고 있는 거야? 변화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사장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설

PT가 신자유주의에 도전하기보다는 그것과 협상하는 쪽을 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명하지?”

PT가 정책을 온건하게 바꾸는 바로 그 때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전투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이 부상했다는 사실은 모순이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사기업화를 좌절시켰다.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시위와 ‘파넬라소스’ [‘정제되지 않은 누런 설탕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최근의 경제 공황 때문에 궁핍화된 사람들의 저항 운동을 말함 — 옮긴이]는 노동자와 빈민들에 대한 공세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PT는 출범 초기에 약속한 것과 달리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운동을 건설하고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고 있다. 최근 PT가 우호적인 지지자들한테서조차 “PT 라이트” [영양가가 줄어든 PT라는 뜻 — 옮긴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노조 활동가나 대중 운동 활동가 들은 룰라의 승리를 기뻐할 것이다. 교육·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돈을 쓰겠다는 공약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PT가 승리한 뒤에도 활동가들은 계속 신자유주의 의제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협회의운동’의 지도적 활동가 세자르 벤자민이 PT를 비판하면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사회가 어떤지 또는 어떻게 보이는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가톨릭 노조관

[편집자 주] 천주교(로마가톨릭) 산하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 사태는 처음에는 임금 문제(사학연금 부담 문제) 때문에 촉발됐으나 나중에는 병원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장기화하고 있다. 오유진이 가톨릭의 노동조합 윤리를 평가한다.

오유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권리를 원칙상 인정하고 있다.

“... 사회 정의를 구현시키려면 ‘노동자들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항상 새로운 결속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 지위 격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 빈곤과 기아 지역의 증가는 이러한 결속이 현실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한다. 교회는 이를 자신의 사명이며 봉사로 그리스도께 대한 충실성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노동자의 권리 추구를 단순히 ... 최대 이익이라는 기준에 의해 운용되는 경제 체제의 결과라고만 운명지을 수는 없다. 그와는 반대로, ... 노동자의 객관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은, ... 전체 경제를 형성하는 ‘타당하고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교회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천명하고 그러한 존엄성과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들을 고발하여, 위에 언급한 변화들[“현대의 경제 구조 및 노동 분배 구조를 재정립하게 하고 재조정하게 하는 것”]을 이끌어 인간과 사회의 참된 진보를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고 생각한다.”

파업권도 인정하고 있으나 단서(“올바른 조건과 정

당한 한도 내에서는”)를 달아 놓았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파업 혹은 작업 중지...[는] 올바른 조건과 정당한 한도 내에서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처벌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

“올바른 조건과 정당한 한도”를 넘는 파업이란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는 파업이지만 또한 “근본적인 공동체 봉사” 또는 “사회의 공동선[이라는] 요구에 상반되”게 “남용”되는 파업도 포함한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입법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봉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파업을 “남용”하는 노조는 “이기주의 집단 또는 계층”이다.

추상적 공문구들 틈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이런 단서에 근거해 가톨릭은 전국의 산하 병원에서 일어난 파업을 “사회의 공동선”에 거슬러 “남용”되는 파업으로, 그러한 파업을 조직한 노조를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규정하고는, 한사코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심지어 직권중재 같은 “적절한 입법 수단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공동체] 봉사[를] 어떤 경우에도 보장”하기 위해 가톨릭은 경찰력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동선과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경쟁과 이윤 축적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시장 논리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바로 이 신자유주의에 저항함으로써 공동체를 구출하고 공동선(공동체 봉사는)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

병원의 소유자가 개인이든, 가톨릭 같은 단체이든, 아니면 국가이든, 소유권에 관계 없이 그 동안 의료 서비스는 시장 원리에 의해 지배돼 왔고 악화돼 왔다. 국립 병원이 “민영화”된 경우 이 점은 더욱 분명하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양질의 노동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하려는 노력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런 노력이 파업으로 나타날 경우, 환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패 여부를 떠나 파업을 겪은 병원이 미래의 갈등 재연을 우려해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면 장기적으로는 환자에게도 좋은 일이다. 아무의 희생도 없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야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자 슐페터는 “공동선의 내용

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공동선이 “특정인들의 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1990년대 중·후반 동안 꾸준히 미국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킨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시절인 1992년 11월 4일에 한 연설에서 “우리엔 새로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미국인 전체를 뜻하지 않고 단지 미국의 상층 중간계급 이상 사회 상층부만을 뜻했다.

부유층과 권력층이 아닌 평범한 계층의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의 공동선은 교황과 사제들이 위선적으로 입에 올리곤 하는 공동선과 다르다. 우리의 공동선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연대, 이를 위한 자기 희생과 영웅적 용기, 그리고 비정한 이윤 논리와 시장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이다. 



교황의 수구 행적

오유진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1986년 초 민주 항쟁에 의해 타도되기 전까지 교황은 마르코스 부부와 친한 필리핀 주재 교황청 대사 토르필리아니를 통해 반정부적인 하이메 신 추기경에게 압력을 넣으려 애썼다. 마르코스가 퇴진한 직후 로마로 소환된 하이메 신 추기경은 바티칸으로부터 “쓰레기처럼 취급당했다.” 바티칸 방문중인 가톨릭중앙의료원 노조원들도 비슷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런지를 이 글에서 보여 주고자 한다.

1920년 폴란드 태생인 카롤 보이티야는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되기 전에 폴란드 크라코프의 대주교를 지낸 적이 있다. 올바르게도 그는 폴란드 연대노조(솔리다르노쉬)를 지지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0~1981년 폴란드 연대노조의 총파업이 혁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까지 고양되자 그것이 좌초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덕분에 야루젤스키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었다.

한 가톨릭 학자(지아니 B 보쵸)가 지적한 바로는, 1981년에 완성된 교황 회칙 <노동하는 인간>은 폴란드에서 연대노조 투쟁이 한창이던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읽을 때 가장 잘 읽힌다.

카롤 보이티야는 스페인에서 파시스트 독재자 프랑코를 지지해 은밀하게 결성된 가톨릭 극우 평신자 단체인 오푸스 데이(‘신의 과업’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은밀하게 지지했다. 교황이 되자 1982년 이 단체를 교황의 직속 기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10월 6일 교황은 마침내 오푸스 데이 창설자 호세-마리아 에스끄리바 데 발라게르(1902년~1975년) 신부를 성인품에 올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판 오푸스 데이라 할 수 있는 ‘친교와 해방’을 지원해 왔다. ‘친교와 해방’은 기독교민주당내 우파 및 마피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일부 사제들의 지도를 받는 극우 단체이다.

1980년대에 어떤 제3세계 나라 추기경이 자기 나라 상황이 극우가 묘사한 바와 다르다고 말했을 때 교황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불평은 그만두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중미 방문을 몇 개월 앞둔 1982년 10월, 교황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버논 월터스 장군을 만나고 나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좌파 정부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산디니스타 정부내 사제 각료 네 명의 사임을(헛되이) 요구했다. 1983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의 중앙 광장에서 가진 대규모 옥외 미사에서 그는 “민중 교

회”를 격렬히 비난하고 니카라과 민중이 우익 콘트라반군과 한통속으로 보고 있던 주교들에게 순명할 것을 훈계했다. 미사 참가자들인 군중이 항의하자 교황은 “조용히 하시오!” 하고 호통치는 것으로 일관했다. 로마로 돌아온 교황은 현대판 종교재판장 요셉 랏쟁어 추기경에게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과 민중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쓰라고 지시했다.

1980년대 중엽의 중미 교황청 대사 피오 라기 대주교는 아르헨티나에 배치돼 일하던 1976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의 야수적 탄압을 정당화해 줬다. 군부는 1983년 물러날 때까지 적어도 몇 천 명을 고문으로 살해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씨야 마르케스는 교황의 “정신 구조”가 냉전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2년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당시 대통령 레이건의 핵무기 증강 계획에 반대하는 문서를 발표하려 했을 때 국무 장관 조지 숄츠와 부통령 조지 부시(현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아버지)는 교황을 만나 미국 주교들에 대해 불평했다. 바티칸의 재정 담당자 요셉 회프너 추기경은 미국 주교들을 비난하고 압력을 가해, 주교들이 초기 구상보다 훨씬 완화된 견해를 표명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바티칸은 냉전주의 집단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은 바티칸의 풍부한 정보망과 연결된 특수 부서를 만들었다. 그 부서는 바티칸과 협력해 나찌 전범들이 주로 남미에 은신처를 찾는 일을 도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중세 “그리스도교 왕국”으로의 복고를 꿈꾸는 가톨릭 전통주의자 또는 “가톨릭 근본주의자”이다. 브라질의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두 보프가 지적하듯이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권력 유지와 권위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미국의 진보적 가톨릭 신학자 찰스 커랜은 바티칸이 나머지 성원들을 “말 못 하는 양들” 취급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 예로, 교황이 되자마자 요한 바오로 2세는 평신자, 특히 여

성들이 성체성사 준비와 성체 분배를 돕고 교리와 성서를 가르칠 수 있었던 네덜란드 가톨릭 교회에 그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그 주교들을 굴복시켰다.

이탈리아에서 낙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을 때, 투표를 앞두고 교황은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은 누구든 파문당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

행히도, 투표자의 다수인 3분의 2가 교황의 협박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교황은 이혼과 피임에도 반대하는 전통적인 가톨릭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다시피 했는데도 이제 그를 자유주의자로 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최근인 1999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옌데 정부를 1973년에

군사 쿠데타로 전복하고 장기 집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 학살한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가택 연금돼 있는 동안 그를 옹호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기는커녕 교황은 반동적이고 교활한 늙은 여우에 지나지 않는다. 

교황권의 성격

오유진

교황권은 역사가 오래 됐고 그 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고대 로마의 노예제 사회로부터 봉건제를 거쳐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리저리한 생산양식이 명멸했어도 교황권은 여태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교황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흥성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다른 모든 제도처럼 교황권도 사회와 함께 변천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로마 가톨릭이 처음에 형성된 건 서기 2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기간이지만, 확립의 결정적인 계기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313년 밀라노 칙령이었다. 성직 관료는 쇠퇴하는 로마 제국을 받쳐 준 몇 안 되는 효과적 버팀목들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몰락하고 있는 체제를 성직자들이 구원할 수는 없었고, 교황권과 교회는 누구든 최대의 세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구가 됐다. 문명의 쇠퇴는 교회의 몰락과 병행했다.

서기 1000년경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제도가 돼 있었다. 기혼 농민 사제, 성직에 임명된 봉신(封臣)에 지나지 않는 주교, 광대한 소유지를 경작시키며 안락하게 살아가는 수도사들, 세상을 등진 은자, 떠돌이 설교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고대 철학과 원시적 자연 숭배를 뒤범벅해 놓은 종교를 믿고 있었다. 한편, 교회의 상부에 있는 로마 주교들은 많은 재산과 부패와 타락한 행동으로 유명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유럽 사회는 극적으로 변했다. 도시가 등장하고, 교역과 수공업 생산이 증대했다. 인구가 증가하고, 이주가 늘고, 농업이 발전했다. 군주정이 등장하고, 왕권의 보호를 받는 정부가 들어섰다. 이 모든 것들 덕분에 서유럽은 세계의 고립되고 낙후

한 지역으로부터 변영하고 발전하는 사회로 변모했다.

서기 1046년부터 개혁파 교황들이 등장해 성직자 집단을 조직된 기구로 재건하기 시작했다. 사제는 결혼이 금지됐고, 주교가 강요하는 규율에 효과적으로 종속됐다. 수도원도 교황의 통제를 받게 됐다. 주교들은 교황의 후원을 받아 군주에게 성직상의 특권을 요구하거나, 왕권의 보호를 받는 정부에 권세 있고

유 능 한
행 정

각료로 입각했다.

교황권은 전성기의 봉건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했다. 그리고 봉건 사회가 계속 변함에 따라 다시 쇠퇴하게 됐다.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세속 문화와 세속 교육이 등장했다. 한편, 고위 성직자들은 부패로 되돌아갔고, 하급 성직자들은 무지와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1500년경 교황은 이탈리아 중부 지방 일부 지역의 봉건 권력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으로 말미암아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가톨릭은 — 다시금 교황의 지도를 받으며 — 살아남았다.

프로테스탄트(개신교)에 뒤처지게 된 교황권은 성직자를 다잡아 훈련시켰고, 가톨릭 교회는 절대 군주와 새로운 자본주의 상공업자들 모두에게 유용함이 입증됐다. 절대 군주는 토지 소유 계급을 대리해 유럽의 대부분을 통치했고, 신흥 상공업 자본가들은 규율 있고 순종적인 노동인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력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상 투쟁에서 드러났다. 갈릴레이가 물질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자 로마는 그를 비난하고 박해했다.

18세기에 교회는 천동설을 처음으로 부정한 코페르니쿠스의 저작을 조용히 금서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고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지적 부조리에서 이력저력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갈릴레이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옹호했다. 그의 사상이 “당시에는 위험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이처럼 봉건 사회의 유산인 교황권이 어떻게 21세기까지 살아남았을까? 봉건적인 체로 남아 있지 않음으로써 그럴 수 있었다. 가톨릭 교회와 교황권 지지 국가들은 19세기에 등장한 국민 국가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가 1870년경에 패배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세속의 일들에 간섭하지 못하게 됐고, 권력도 박탈당했다. 하지만 오늘날 교황은 거액을 투자하는 자본주의 투자가이

다. 그리고 이 금융 투기에서만큼은 바티칸은 매우 ‘자유주의적’이다.

1864년 교황 비오 9세는 자유와 민주라는 사상을 포용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자유주의자들을 비난했다. 그가 <오류 교서>에서 열거한 자유주의자들의 여든 가지 “오류”에는 종교적 관용, 세속 교육, 다수결, 정교분리 등이 포함됐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밀 결사, (성서 보급을 위한)성서공회, 자유주의적 성직자 단체”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비난받았다. 비오 9세는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해 엄격한 교리를 확정했고, 교황 무오류설을 주창했다. 요즘의 신부들도 믿고 있는 이 교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근대 문명에 대한 반동에 지나지 않았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8년 뒤에 치러진 비오 9세의 장례식은 군중의 공격을 받았다. 민병대가 도착해 군중을 저지함으로써 가까스로 관이 티베르 강물로 던져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후임 교황 레오 13세는 1891년 <노동헌장> 반포를 통해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보려 했다. 그가 인정한 노동자 권리에는 최저생계비 임금, 어지간한 근로조건, 노동조합 결성권 등이었다. <노동헌장>은 또한 사유재산이 신이 준 법률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투쟁할 권리는 아무 데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헌장>은 계급 투쟁을 명시적으로 비난했다. 그 “헌장”은 실제로는 사용자들과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의무를 다하라는 호소였다. 가톨릭 사용자와 가톨릭 정부조차 전혀 열의를 가지고 이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이 자유주의적이 됐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비오 9세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의 반동적이기 이를 데 없는 사상에 역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티칸은 새로운 사상에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았다. 가령 바티칸은 교황 무오류설을 비판한 한스 쾨링은 물론 “정치신학”을 주창한 요안 바티스트 메츠, 심지어 칼 라너조차 기피 인물로 낙인찍었다. 라너는 다른 종교에도 “익명의 그리스도”가 숨어 있으므로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1960년대 이후 바티칸의 공식 결정과 평신자 사이에 차이가 벌어져 왔다. 1980년대 초 보수화 분위기 속에서조차 미국의 기혼 가톨릭 신자의 85퍼센트가 1968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재천명한 피임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로마와 일부 지역 성직자들 사이에 견해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중미와 브라

종교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갈릴레이

질의 사제 중 다수가 해방신학을 지지했다. 반면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멕시코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개막식 석상에서 해방신학을 비난했다.

오늘날 교황권은 가톨릭 교회가 활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보수 세력과 동맹함으로써 생존하고 있다. 비오 12세 하의 교황권은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지지했다. 비오 12세가 되기 전의 에우제니오 파첼리 추기경은 히틀러가 독일 제3제국 총리에 취임한 해인 1933년, 교황청 국무부 장관으로서 히틀러와 “제국 협약”을 맺었다. 이 때 히틀러는 이렇게 선언했다. “국제 유대인 집단에 대항한 긴급한 투쟁에서 특히 중요할 신뢰권(信託)이 창출됐다.” 바티칸은 아직까지도 이 당시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오 12세는 홀러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제 앞가림을 할 줄 안다”고 냉소적으로 말했고, 나중에는 홀러코스트가 “과장됐다”고 말했다.

보수 세력과 동맹은 때때로 고난도의 교묘한 수완이다. 왜냐하면 가장 반동적인 세력은 때때로 패배하고 교황의 정책은 생존자 쪽에 서려 애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야만적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등과 같은 복잡한 책략이 필요했다. 아프리카(특히 짐바브웨)의 백인 식민주의에 대한 지 지로부터 가장 보수적인 흑인 세력 지지로 전환하는

것도 고난도 기술이었다. 그리고 노동자 저항을 무마한 대가로 교황권을 존중해 준 일부 동유럽 스탈린주의 정권(특히 폴란드 야루젤스키 정권)과의 공생 관계도 들 수 있다.

교회는 또한 모든 계급 사회에 “민중의 아편”을 위한 시장이 있고 교회는 그 시장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여성이 가장 쉬운 타깃인데, 극도의 저임금 노동에 매여 있는 제3세계 여성들일수록 피임과 낙태에 대한 교회의 반동적 입장에 동화시키기가 더 쉽다.

하지만 중미와 브라질에서처럼 가톨릭이 자유와 독립과 사회 정의를 위한 피억압자·피착취자의 투쟁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가 있다. 그 동안 교황권은 가톨릭을 그러한 투쟁에서 떼어놓느라 열심이었다. 하지만 현지의 하급 사제들은 그다지 열심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평신자들은 흔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권리를 지키는 것을 따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곤 한다.

교황권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책략을 써서 적응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적응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계급 없는 사회이다. 모든 보수적 세력, 지배하고 착취하는 계급, 억압 따위를 퇴치할 때만 유럽산 민중의 아편, 가톨릭은 차츰 있으나마나한 것이 돼 가고 교황권도 사라질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어떤가?

[편집자 주] 가톨릭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개신교)도, 그것도 가장 진보적 교단이라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의 권호경 목사도 노동 쟁의의 과녁이 돼 있다. 천주교와 기장은 김대중과의 동맹 덕분에 민주 개혁 세력으로 여겨졌었고, 바로 이런 인상을 이용해 김대중과 CMC와 CBS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 인상은 잔영일 뿐임을 오유진이 들춰 낸다.

오유진

11세기에 교황권이 가톨릭 교회의 재편에 착수할 때와 거의 같은 때에 교회의 권위를 대중이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 때에야 비로소 가톨릭 교회의 권력에 두드러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부터 교황권, 중세 사상, 성직자 독신 제도 등을 신랄하고 대중적인 말투로 비판하고 때로 중상·비방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 불합리한 사상, 아무에 게도 전혀 쓸모 없다는 점 등을 들춰 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전혀 탄판일 수 있음을 성서에 바탕을 두고 보여 줬다. 좀더 합리적이고, 평신도에게 좀더 의미 있고, 일상 생활과 좀더 관련성 있고,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사제들의 신비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주장이 없는 그리스도교가 가능함을 그는 보여 줬다.

루터는 그에 앞선 이단자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았다. 즉, 그는 유럽 전역의 다양한 사회 계급들에게 매력력을 주는 사상을 설교함으로써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한 계급들 가운데 신흥 부르주아지가 있었다. 이 신흥 상공업자들은 도시를 관리하면서 교역과 수공업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었는데, 욕심 많고 간섭하기 좋아하는 성직자들과 불명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의 사상을 싫어했다. 루터는 또한 봉건 귀족의 호감도 샀다. 그래서 그는 중세 독일 제국을 분할하고 있던 지방 제후들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 맞선 투쟁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농민과 도시 수공업자와 노동자가 자기의 사상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루터는 교회와 성직자는 표적인 반면에 봉건 지주와 신흥 상공업자에게는 해를 끼쳐서는 안 됨을 분명히 했다.

1525년, 경제적 고통을 겪어 온 데다 영주와 제후의 권력 강화에 부딪힌 독일 농민들이 참다 못해 기존 사회 질서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엥겔스의 《독일 농민 전쟁》에 생생하게 묘사

돼 있다.) 혁명적 프로테스탄트 설교자 토마스 뮌처의 고무받은 농민들은 착취와 억압에 맞선 투쟁과 성서의 메시지를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그들은 평등, 고정 지대, 농민 회회 등을 요구했고, 많은 도시민들과 농촌 수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루터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폭력적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영주와 농민을 똑같이 비난하더니 일단 농민군이 진격하기 시작하자 영주들에게 농민을 “썰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살해하라”고 말했다. 농민이 “신앙심 없고, [하나님 앞에서]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는 악한과 무뢰한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별로 육체와 영혼을 몰수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민은 그 뒤 실제로 대량 학살당했다.

제네바로 이주한 프랑스 변호사 장 칼뱅의 개신교 사상(오늘날의 장로회가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다)이 16세기 중엽의 사회 변혁에 더 적합한 관점을 제공했다. 그가 통치한 제네바에서 그의 개혁은 신흥 상공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됐다. 칼뱅도 지배자들에 대한 반란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루터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톨릭 반대 정치 행동을 정당화했다. 크리스천 시민은 학정과 불경스러움을 퇴치하는 사회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칼뱅은 그러한 정치 행동이 특히 크리스천 국가 관료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도시민과 수공업자와 농민뿐 아니라 반동적이고 퇴영적인 일부 귀족도 칼뱅의 대의를 수용했다.(이 점은 명화 “여왕 마고”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프랑스 농민이 가톨릭 영주에 맞서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프로테스탄트 귀족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칼뱅 파 의회에서 표명했고, 이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혁명은 유산됐다. 또, 리옹 시 인쇄공들은 처음에 칼뱅주의를 지지했으나, 파업중에 배신자들을 구타한 것을 프로테스탄트 관리들이 비난하자 칼뱅주의를 버렸다.

영국의 칼뱅 파인 청교도들은 찰스 1세와 국교회

들어보내 노동 규율과 정규적인 생산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의 요새는 미국이다. 1997년 당시 미국인의 85.2퍼센트가 그리스도교 신을 믿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3분의 1 이상이 근본주의 신앙(성경 무오류설을 믿는)을 고백하고 있다. 근본주의는 1980년대 이래로, 특히 지난해 9·11 이래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다. 정치적으로 반동적인 개신교 근본주의는 상당수 부시 정부 각료들(특히 법무 장관 존 애슈크로프트와 부통령 딕 체니와 국방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와 국무 장관 콜

린 파월을 포함한다)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근본주의는 또 가톨릭처럼 동성애와 낙태와 미혼모에 반대하고 가정 가치관을 수호한다. 근본주의적 교계 지도자(가령 ‘기독교연합’ 총재 팻 로버트슨 같은 자)들은 미국 사회의 언저리에 있는 인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피억압자 운동의 주적에 포함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주류는 가톨릭이나 자유주의적 개신교가 아니라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개신교이다. 복음주의는 근본주의보다 온건한 보수주의라 할 수 있으나, 근본주의자들도 복음주의자를 자처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는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를 믿다가 비종교인이거나 타종교인이 된 사람 수가 무려 1천만 명이 넘는다(각각 8백만 명과 2백만 명). 물론 새로 개신교인이 되는 사람도 계속 생겨나지만 전체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성장의 위기에 직면한 개신교는 갈수록 종파주의적이 돼 가고 있고, 신비주의적이 돼 가고 있고,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 둔화가 질적 미성숙을 낳고, 질적 미성숙이 성장 둔화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CBS 권호경 사장과 재단이 사회의 경우도 이런 추세 일부가 된 옛 진보적 성직자 이미지의 잔영일 뿐이다.

교황권은 봉건 사회가 몰락해도 반동을 이용함으로써 — 또 그럼으로써만 — 존속할 수 있었던 반동적·기생적·억압적 제도이다. 그러나 개신교도 착취와 억압을 이용해 왔고, 가톨릭보다 덜 기생적이라 할 수 없다. 

(성공회)내 고교회파(高敎會派)에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했다. 고교회파는 로마 가톨릭의 교의(敎義)와 전례(典禮)와 의식(儀式)을 상당 부분을 고수하려 했던 국교회내 권력자들이었다. 그런데 청교도들 안에서 정말로 급진적인 사상이 등장하려 할 때마다 청교도 지도자들은 그것을 억누르곤 했다. 가령 모든 청교도들(장로회·조합교회·침례회)이 철저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수평파를 비난했다.

칼뱅 파는 가톨릭 못지 않게 엄격히 “이단”을 색출해 박해했다. 스페인 출신의 망명자 미겔 세르베투스(세르비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 해서 제네바에서 산 채로 화형에 처해졌다. 영국 수평파의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만인의 구원을 위해 죽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받았다. 칼뱅 파는 자파 소속의 “선민”만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었)다.

근면·절약·투자라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봉건 사회의 옛 위계제를 허무는 데 일조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수공업자·임금노동자 같은 생산자들에게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에 순종하는 것을 뜻했다. 신앙이 개인의 “양심”에 호소해 그를 순응하게 만드는 데는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적어도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대항하는 16~17세기 가톨릭 자체의 “대항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그랬다.) 개신교는 평신도를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 공장이 거의 없고 자본가들이 수공업자와 농민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사회에서 개신교는 노동자 개개인의 마음 속에 ‘마음의 경찰관’을

실현 불가능한 몽상인가?

정병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자, 기성 언론들이 검증에 나섰다. 1997년 대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1997년 당시 국민승리21 후보로 출마한 권영길 후보는 여타 군소 후보들과 함께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물론, 여전히 민주노동당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분위기가 강력하다. 권영길 후보는 주요 언론사 토론에 기껏해야 세 번 참석할 수 있었다. 언론 보도는 여전히 인색하다. 또, 얼마 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선거법 개악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성 언론들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백34만 표를 얻으며 일약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노동당의 선거 강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거의 모든 토론에서 패널들은 노무현과 권영길 후보가 연대할 것인지 아닌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사실상 이들은 은근히 중도 사퇴를 종용하는 듯하다.

물론,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중 일부가 노무현과 연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해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로 복귀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우익 정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회창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

다 해도 그 시도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회창의 냉전·수구 정치는 대중투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권영길 후보도 이 점을 잘 주장했다. “이회창이 대통령 돼서 공안 정국 온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굴복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회창 씨가 그렇게 나가면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6개월은 봐주겠지만 그 다음은 용서 없지요.” (《말》 10월호.)

노무현에게 기대서는 이회창을 제압할 수 없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그랬듯이 우익에 일관되게 맞서지 못하고 흔히 타협한다. 특히, “시장주의자” 노무현은 시장 개혁 과정에서 노동 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그는 얼마 전에도 “시장 개혁이 불철저한 게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10월 12일 KBS 심야토론). 이 때문에 노무현과의 연대는 우익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 — 노동계급 — 을 무장 해제시킨다.

권영길 후보는 옹케도 노무현과의 연대를 거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한 민주당의 후보인 노무현 후보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권영길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9월 26일 MBC 100분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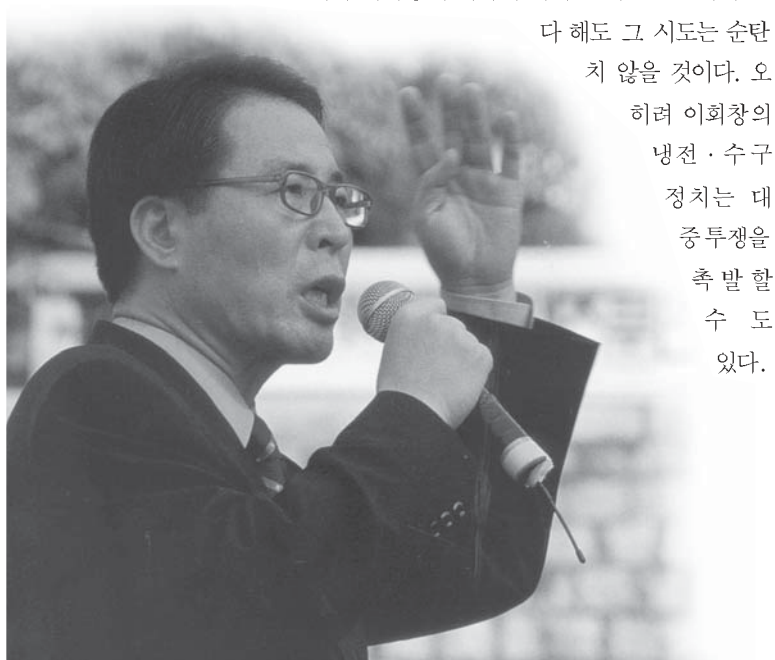
부자세상에 대한도전

노무현과 민주노동당이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은 최근 발표한 민주노동당의 선거 강령에 대한 태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등을 요구하는 강령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지난 50년 동안 노동자·서민들이 품어 온 열망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이 공약을 실현할 방안으로 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유세 강령에 대해 토론회 패널들은 하나같이 “성장을 생각하지 않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마치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 때문에 경제 위기가 도래하는 것처럼 매도했다. 그러나 기업들 간의 경쟁 격화로 인한 과잉 축적이야말로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진정한 원인이다.

지금껏 IMF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주들은 전혀 “고통 분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민중이 희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



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
의 소득 격차는 1996년
3.3배에서 2001년에는
5.4배로 증가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강령은 정당하다. 항상 기
업주들은 경제가 잘 되면
분배가 보장될 것처럼 말
하지만, 이는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

토론회 패널들은 “조세
저항” 때문에 부유세 강
령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노
무현도 “[부유세]를 인정
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돼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하고 말
했다.

그러나 부유세 도입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수
가 아니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의 72.1퍼센트
가 부유세 도입을 찬성한다. 부유세 도입에 저항할 세
력들은 소수의 부자들이다. 결국 노무현은 기득권 세
력의 저항이 무서워 부유세를 반대하는 셈이다.

물론 기득권 세력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부와 물
리적 힘 그리고 이데올로기 유포 수단을 독점하고 있
다. 그들은 이러한 권력을 자신들이 소유한 막대한 부
를 지키는 데 쓰려 한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조직적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선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권영
길 후보는 대중 투쟁을 강조하기보다는 부자들도 “[부
유세를] 받아들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는 식으로
부자들의 도덕에 호소하는 인상을 주었다(9월 26일
MBC 100분 토론).

한편, 권영길 후보는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미군 장갑차
에 의해 두 여중생이 살해됐을 때, 기성 정당의 어느 후
보도 미국에 항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왜 미국에 반
대하는지 분명히 주장했다. “저희들이 미국에 대해 반
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
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경제를 IMF를 내세
워 예측경제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
국주의적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10월 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권영길 후보는 노무현과 달리

1997년 1월 파업 같은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개혁을 쟁
취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 투쟁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군병력 20만
명 감축,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모병제 실시 그리고
남북한 상호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
로 내걸었다. 또, 넉달이 넘게 싸우고 있는 병원 노동자
들의 파업 투쟁을 옹호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내건 선거 강령은 기성
정당의 후보들이 도무지 대변하려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실
현 불가능한 몽상이 아니다. 이 사회에는 이미 모든 국
민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가 존재한다. 문제는 극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너무
나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
범한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선 기업주들의 이
윤과 부자들의 권력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이윤 추구, 부자들의 탐욕, 초강
대국 미국의 패권 때문에 체제 내의 진지한 개혁 시도
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경
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들은 조그만 개혁 조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의회적 방
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변혁적
대중 투쟁.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선거 강령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길이다. 김영삼을 꼬꾸라트린 1997년 1월
파업과 같은 대중 투쟁만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좌
절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왜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국
(자통협 공동의장)



사진 이진화

최근 신문을 보면 미국의 부시 정권이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량파괴무기니 사찰이니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걸로 드러나는 문제는 후세인 정권이 대량파괴무기, 즉 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나 북한과 같은 제3세계 반미 국가이며 미국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미국 체제에 도전하기 위해 대량파괴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가상의 적으로 몇 나라를 “깡패 국가”나 “악의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빌미로 미국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군비를 확장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미국은 영국 제국주의를 이어받아 중동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기본은 쉽게 말해, 무기를 팔아서 원유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원유 자원을 대표하는 오일 매니저와 군수 자원을 대표하는 군산복합체의 의지를 종합해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입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팔아 무기를 사게 하려면 중동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은 전쟁 정책입니다. 전쟁 정책에서 경제와 안보는 양 날개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유세장에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경제와 안보의

양 날개를 통해 미국 국익을 증진하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클린턴은 안보를 조금 낮추고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부시는 공화당 정권이기 때문에 클린턴과 정강 정책이 다릅니다.

그런데 경제와 안보를 조절해 주는 것이 시장 메카니즘입니다. 자본은 크게 보면 금융자본 같은 민간자본과 군수자본으로 나뉩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전쟁을 벌일 때 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1년 전 9·11 사태 뒤 전쟁을 선포하자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군수업체 주식이 주도해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미국 경제가 활성화하는 전망 속에서 전쟁을 자신있게 벌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면 할수록 월스트리트에서 주식값이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 통설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중심이 IT 산업일 때는 이 통설이 1백퍼센트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민간자본의 의지가 증권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전쟁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시는 매일 전쟁을 하고 싶어합니다. 전쟁 중독증에 걸린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판을 크게 벌였습니다. 바로 “반테러 전쟁”입니다. 테러에 반대하느냐 마느냐를 전 세계에 묻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묻습니다. 감히 누가 빈 라덴 편에 선다고 하겠어요? 전 세계가, 중국까지 전부 “반테러 전쟁”에 참여합니다. 냉전 시대 “원원 전략”보다 더 재미보는 “반테러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몰이를 전개합니다. 이것은 “원원 전략”을 살짝 수정한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도 “반테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내 반군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 마음대로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는 부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반반입니다. 이라크 공격을 놓고 미국 내 여론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럼스펠드와 국무성의 온건파, 즉 럼스펠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파월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전쟁에 합의할 때 파월은 땀을 흘려 UN 안보리를 통과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파월 쪽이 힘이 커져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론이 분열했습니다. 럼스펠드는 군수자본 쪽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파월은 금융자본이나 전쟁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장 반응을 대변합니다. 파월도 정치가라서 김새를 채고 자기가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전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논쟁으로까지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시가 파월처럼 전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라크에 대한 막가파식 공격의 고삐는 느슨해지고, 중동에 훈풍이 불면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해 신자유주의 운영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일 먼저 프랑스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917~1935년에 영국이 이라크를 지배할 때 프랑스에 지금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유전 관할권을 줬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동이나 이라크에 대해 자신이 대주주 못지 않은 주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에 친미 정부를 세워 이라크 석유 이권을 미국이 손에 넣는 것을 우려합니다.

또, 러시아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합니다. 러시아 푸틴 정권은 그루지야 카스피해 쪽, 옛 소련 땅의 엄청난 유전지대이자 천연가스가 많은 지대를 자기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 유전을 놓고 미국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러시아도 이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원유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까지 포함하면 원유 삼국지입니다. 이 전쟁의 확대판이 이라크 전쟁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계획을 놓고 유럽 시장이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왕따”당하고 있습니다. 일방주의 대 다자주의의 대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판 미국 “왕따” 현상이라고 할 이런 것들이 아시아권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미국 “꼬봉”이라는 일본마저도 미국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결재도 받지 않고 평양에 가 정상회담을 하는 판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다국적기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지배자들도 미국 제국주의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주지사인 신타로 같은

극우파도 미국에 반대합니다. 우파 진영의 반미 분위기가 지 겹들여져서 일본 고이즈미 수상도 미국에 아름다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미국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부시는 히틀러와 똑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독일 법무부 장관은 선거 직전에 자기 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흔들렸었습니다. 겨우 연정이 선거에 이겨서 목이 다시 붙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40만 명이 참가한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스페인에서도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10월 26일 미국 반전 시위에 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이 날 1백만 명 정도가 시위를 벌이면 부시가 이라크 전쟁 계획을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 운동이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럼스펠드가 대장인 펜타곤·군수자본·군산복합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얻은 재미를 이라크에서도 보려고 합니다. 좀더 가속도를 붙여서 북한과도 전쟁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전쟁 욕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의 힘이 창출되도록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이 단결해 돌아붙어야 합니다. 전쟁 지향적인 신자유주의를 때려부수고 자원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철광과 석탄을 공동 관리하는 1956년에 ECSC, 즉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를 만들어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이 EC였는데 이제 EU입니다. 이 유로화로 뿔뿔뿔뿔 EU가 공동의 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 지향적입니까?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것은 부시가 말한 신자유주의와 정반대입니다. 자원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보면 유럽의 공동 안보는 평화를 향한 것입니다.

한반도도 유럽만큼 해서 동아시아에서 평화 지대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관통해 시베리아로 달리는 철의 실크로드, 북일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일본—한반도—시베리아를 연결해 달리는 철의 실크로드에 미국·일본 자본을 싣고 달리면 평화 지향적인 자원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평화, 평화” 할 것이 아니라 부시가 얘기한 경제와 안보를 평화 지향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시의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40만 명이 반전 시위를 할 때 우리는 50만 명이 반전 시위를 벌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통일 좌파”를 위해

김민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범추’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사회당 대선기획위원회가 “통일 좌파”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주되게 ‘노동자의 힘’ 조직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 좌파” 제안 문서의 상당 부분을 ‘노동자의 힘’과의 관계에 할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힘’은 사회당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전국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제안했다. 사회당은 처음에는 ‘노동자의 힘’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공투본” 제안을 수용하자 느닷없이 “공투본” 예비 모임의 “성격과 활동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사회당 지도부가 이렇듯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하다. 먼저, 사회당 지도부는 “좌파”를 매우 협소하고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좌파는 “부와 권력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고 믿거나,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근접한 사상을 채택한 정치 단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좌파는 자본주의나 보수주의 정치 사상을 지지하는 우파와 대비된다.”

물론 좌파 내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 혁명을 추구하는 혁명적 좌파가 있는가 하면 체제 내 개혁만을 추구하는 좌파가 있다. 그 둘 사이에는 중도주의 좌파(중간파)가 있다. 사회당이 이런 스펙트럼 가운데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사회당 자신이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반보수 투쟁의 전술적 차이를 둘러싼 논쟁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전망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 수구 보수 정당에 맞서 노무현과 모종의 연대를 추구하는 포퓰리즘은 조만간 개량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계급 협력 사상인 포퓰리즘에 맞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 대중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같은 개량주의의 타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선진 노동자들(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조차 보수에 맞선 범진보 진영의 단결을 지지하고 있

는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사회당 지도부는 최대 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통일 좌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당과 노동자주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사회당의 “통일 좌파”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 대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당에게 민주노동당은 NL, 개량주의자들,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결탁해 만든 “주류 연합”일 뿐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타협적이고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 당이고, 민주노총은 계급 운동을 자제하는 구실만을 한다는 것이다. 4월 2일 민주노총 지도부의 발전 파업 배신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무비판적 논평이 사회당의 이런 태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든 듯하다.

“좌파는 우선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주사-국민주, 개량-중앙파를 밀어내고 공식적 대중 권력이 됨으로써 대중을 분기시켜 이 더러운 체제와 맞서는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사회당 대선기획위원회, <통일 좌파>, 11쪽.)

이 참에 분명하게 시비를 가리고 가야 할 게 있다.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을 주사파 혹은 NL의 당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다. 민주노동당이 NL의 당이라면 7월의 ‘범추’ 논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확히 말하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진보적 지식인 다수를 중심으로 한 좌파 연합 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안에는 PD 경향의 분파들과 ‘다함께’ 분파도 존재한다.

위에서 인용한 사회당의 주장은 1970년대 이탈리아 노동자주의자들과 꽤나 흡사하다. 당시 가장 유력한 노동자주의 단체였던 ‘노동자 권력’(Potere Operaio : 안토니오 네그리도 이 단체의 이론가였다)은 이탈리아공산당(PCI)을 억압적인 국가 기구의 일부로, 노동조합을 단순히 계급 투쟁을 후퇴시키는 구실만 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 때문에 PO는 1968~1969년 파업 때 등장한 노동조합이나 공장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그러기보다는 노동자들을 자본으로부터 완전히

현 단계에서 사회당이 자신을 애써 민주노동당과 구별지어 할수록 사회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리시키는 정책을 구사했다. PO는 노동조합과 PCI가 노동 계급 투쟁에 자본의 계획을 전파한다고 봤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이로부터 분리시키려 했다. 이것은 더한층의 자본주의 발전과 철저히 충돌을 빚는 요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들이 10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우리는 100을 요구할 것이다. 저들이 100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우리는 1000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당도 그 비슷한 주장을 한다. “자본은 작은 권력과 돈 맛을 알게 된 상층 간부들을 각종의 희한한 수단으로 엮어매 놓고 있다.” 때문에 “현장의 주체 재형성”이 필요하다. 즉, “임금 인상 투쟁 아무리 해 봐야 노동자의 계급 의식을 고취할 수 없”으니 이런 “저열한 요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계급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라는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단결하여 싸울 수 있는 현장 주체로서 재조직되어야 한다.” (사회당 대선기획위원회, <통일 좌파>, 17쪽.)

사회당 지도부는 전체 노동 계급의 현재 의식과 극소수 노동자의 정서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 개인들이 “통일 좌파” 주위로 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려 할 때는 심각한 고립을 겪을 것이다. 결국 사회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의지로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후보 전술과 종파주의

“통일 좌파”가 좌절된 상황에서 사회당은 제14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사회주의 후보’ 전술을 채택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통일 좌파”에 내재된 논리적 결론이다.

그러나 선진 노동자 대중은 이제 서야 노동조합의 울타리를 넘어 정치화의 여정을 막 시작했다. 이 과정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 그러기는 커녕 매우 불균등하다.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노무현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정치 논쟁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는 현실을 보라.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이나 하는 문제는 극소수 좌파에게나 관심 있을 뿐이다.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자의 다수는 사회당이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는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정책들에 대해서조차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여긴

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정치적 차이도 모른다. 무엇보다 두 진보 정당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물론 이것은 진보 정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기성 정치권과 언론의 탓이 크지만 말이다.) 원칙과 전술을 구별할 줄 아는 좌파라면 전술 문제에서는 이런 대중의 경험과 의식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좌파들에게만 입증된 것을 광범한 대중에게도 입증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사회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지난 6·13 지방 선거 때 사회당의 원용수 서울시장 후보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 누구는 1백 명의 사회주의자가 있으면 1백 종류의 사회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도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두 당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당이 굳이 “사회주의”라는 ‘특별한 표지’를 내걸고 대선에 따로 출마해야 하는가.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기 존재의 정당성과 명예를 계급 운동과의 공통점이 아니라 운동과 자신을 구별짓는 특별한 표지에서 찾는” 태도는 종파주의다. 현 단계에서 사회당이 자신을 애써 민주노동당과 구별지으려 할수록 사회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당에게는 공동 전선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10월 18일에 김영규 씨가 사회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노무현과의 '개혁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 독자 정당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공동 대표 박태주 씨는 10월 12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민주노동당이 노무현과 연대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썼다. 이 글은 박태주 씨 글에 대한 반론으로 10월 17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글이다. 재게재를 허락한 <한겨레>에 감사드린다.

김인식

박태주 씨의 주장은 노무현 지지론의 노동계 버전이다.

박태주 씨의 노무현 지지론은 노동자운동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불신에서 비롯된 듯하다 — 저조한 노조 조직률,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비롯한 파편성, 노조 관료화 징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 등. 이것은 일면적이고 인상주의적인 인식이다. 이로부터 도출된 박태주 씨의 정치적 결론은 노동자 정당이 “진보적 부르주아와 정치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 독자 정당 전략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정치적 소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성 보수 정당과 “경쟁 관계”(즉, 정치적 결별)를 맺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태주 씨는 “노동자 독자 정당 전략”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 침묵한다. 그 동안 기성 보수 정당들은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철저히 배제했다. 군사독재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모두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했다. 요컨대, 기성 정당들을 지지하는 대가로 돌아올 것이 없다는 노동자 대중의 역사적 자각이 “노동자 독자 정당 전략”의 배경이었다. 영국 노동자 운동이 자유당과 결별하고 1900년에 노동당을 창립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과 정책 연합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일부 지도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지만 대다수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거나 더 나빠졌다. 2000년 7월 금융노조 파업과 그 해 12월 국민·주택은행 파업은 그 때문이었다. 이렇게 투쟁을 경험한 금융노조가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민주노동당(“노동자 독자 정당 전략”)에 가장 우호적인 것을 우연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박태주 씨는 노동 운동에 경고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회창과 정몽준을 지지하는 현실을 잊지 말

라고. 민주노동당의 선거 출마가 노무현 표를 갉아먹어 수구 보수 정당을 이롭게 한다는 비판도 함축하는 듯하다. 그러나 수구 보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그것은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보수를 실천한 김대중 정부의 실패가 빚어 낸 결과이지 민주노동당의 선거 출마 때문이 아니다.

게다가 박태주 씨의 주장처럼 노무현의 노동 정책이 이회창과 “예각적으로 대립”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 정책에 관한 한 둘 사이에는 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노무현의 정책은 재벌의 이익을 근본으로 거스르지 않는다. 이미 그는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과 2001년 대우차 파업 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초 발전 파업 때는 발전소 매각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태주 씨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영국 노동당과 자유당의 선거 연합을 끌어 낸다. 1848년 차티스트 운동이 패배한 뒤 40년 동안 영국 숙련 노동자들의 노조 지도자들이 자유당에 의지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당 창립자인 케어 하디도 처음에는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의 자유당 지지 대가는 공수표였다. 그래서 하디는 “자유당-노동당 대표 위원회” 연합 소속 의원들을 “성대를 제거해 짓지 못하는 개”라고 경멸했다. 바로 이런 경험이 노동당 창당 배경이 됐다. 그리고 우리 나라 노동자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박태주 씨는 “두꺼비가 독사에 잡아 먹힘으로써 새끼를 낳”듯이 민주노동당이 노무현과 연대해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과학적 비유다. 두꺼비 같은 개구리목은 체외 수정을 한다. 그러니 박태주 씨의 비유 같은 생태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진실은 독사가 두꺼비를 잡아 먹게 되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진실은 노동자 정당이 “진보적 부르주아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자 정당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케어 하디는 노동당이 자유당과 함께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독립성을 잃어버려 자유당에 복속될 것이며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과의 연대는 퇴보다

김어진

이회창 같은 우익 정치인들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민주당에도 실망했지만 민주노동당을 당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혁국민정당이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개혁국민정당의 주장과 대안은 그리 참신하지 않다. 개혁국민정당의 중심 인물인 유시민은 민주노동당 더러 노무현과 정책연합을 하라고 제안한다. 민주노동당이 너무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10월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신자유주의 저지” 같은 “부담스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구닥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경제를 수용하는 자신을 “신보수”라 칭했다.

이런 그가 대안으로 여기는 것은 ‘독일식 자본주의’다.

그러나 유럽 시장의 주축인 독일 자본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많은 기업이 파산했고 주요 경제 지표들은 6~7년 사이 최저치다. 올해에만 일자리 60만 개가 사라졌다.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인 코메르츠 뱅크는 큰 손해를 본 뒤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다.

유시민은 개혁국민정당의 강령이 독일 사회민주당을 본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독일 사회민주당이 집권 기간 내내 한 일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실업수당이라도 받으려면 임시직 일자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 반면에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었다. 독일 자본주의 수장인 슈뢰더는 전쟁과 시장을 지지했다. 슈뢰더는 히틀러 패망 뒤 최초로 독일 전투 부대를 외

국에 파병했다. 반면에 부유세를 주장한 전 재무장관 오스카 라퐁텐을 해임했다.

유시민이 옹호하는 시장 개혁이야말로 늙고 병든 자본주의를 더한층 위기로 빠뜨리는 구닥다리 처방이다. 슈뢰더는 균형 재정을 위해 긴축 예산을 짜는 방향으로 적녹연정 2기 경제 정책을 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뜩이나 소비가 감소해 ‘일본형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는 독일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이다.

유시민은 신자유주의와 시장 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민주노동당을 달달한다. 그는 신자유주의 반대 같은 구호는 스스로를 주변화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 슈뢰더가 승리한 것은 전쟁과 시장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거둔 태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덕분에 슈뢰더는 간신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장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유럽의 기성 정치인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련의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도 그것을 입증하지 않는가.

유시민은 극우파의 헤게모니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무기로 삼는 노무현은 너무도 빈약한 수단이다.

노무현은 기성 정치에 태생적으로 뿌리박힌 친미주의와 어떤 단절도 하지 않는다. 노무현은 살인 미군을 법정에서 세우라는 요구를 거부한다. 그는 김대중 정권의 부정비리도 옛 정권들과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액수라며 부패를 두둔하고, ‘사기업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본능적인 반감을 드러낼 정도로 부자들의 체제에 충성하고자 한다.

노무현 지지는 미래를 위한 전진이 아니라 퇴보다.

이회창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 부패, 친세벌, 친미, 친시장주의로 얼룩진 우익을 물리치려면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일관되게 저항할 힘을 결집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기성 정당과 단절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힘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우익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반전 운동의 승리

해외 좌파 저널에서

지난 9월 22일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총리로 재선된 것은 조지 W 부시와 전쟁광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다. 슈뢰더가 이번 선거에서 엄청나게 지지율을 회복해 가까스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슈뢰더가 유엔이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더라도 자기는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슈뢰더의 사회민주당(SPD)은 강경 우파인 기민-기사 연합의 에드문트 슈토이버보다 9퍼센트나 뒤진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9월 22일 선거에서 SPD는 2백51석을 얻었고, 보수당은 2백4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슈뢰더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이 선거 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인 8.6퍼센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비해 SPD의 지지율은 슈뢰더가 16년의 보수당 지배를 끝장낸 1998년보다 하락했다.

노동계급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환멸이 존재하고 있고, 실업률은 지난 12개월 동안 증가해 슈뢰더 집권 초기의 4백만 명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독일의 저명한 논평가들은 선거 기간에 슈뢰더가 반전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SPD와 녹색당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보수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투표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한다.

반전 태도 덕분에 SPD는 옛 동독 지역에서 민주사회당(PSD)[옛 공산당]의 표를 가져올 수 있었다. PSD는 두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독일 선거 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얻은 지지율

인 4퍼센트를 반영하는 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지는 못했다. 부시 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쟁이 핵심 쟁점이 되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여론 조사 이를 전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슈뢰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SPD와 녹색당의 승리는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의 이데올로기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년 동안 유럽에서 중도 좌파 정당들이 잇달아 패배했다. 특히 프랑스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네덜란드에서 그랬다.

이 때문에 블레어 지지 논객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이민이나 범죄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 불안 분위기를 조장하는 우파나 우익(극우파)을 모방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에드문트 슈토이버는 선거 막바지 열흘 동안 인종 차별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슈뢰더가 이겼다.

슈뢰더는 난민 규제 조치들을 도입했지만, 선거 기간에는 이주자들을 공격하는 보수적인 태도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전보다는 허약해진 상태에서 집권했고, 훨씬 더 심해진 정치 · 경제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슈뢰더를

지지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의 반전 태도가 굳건히 지켜질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

슈뢰더는 미국의 발칸 반도 전쟁을 지지했고, 과거 이라크 공격을 지지했다. 그가 이번 전쟁에 반대한 것은 그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독일 대기업주들이 중동에서 미국이 승리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슈뢰더는 유럽의

“신속대응군” 창설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 신속대응군이 발전하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처럼 전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슈뢰더가 전쟁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이라크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독일 내 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부시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이것은 군국주의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좌파 세력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는 경제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여름 슈뢰더는 폴크스바겐의 인사담당 이사이던 페터 하르츠를 실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 기구가 내놓은 주된 안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고 신노동당 식의 “생산적 복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슈뢰더는 이 안을 받아들였지만 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두려워 이 조치를 분명하게 실행하는 것은 피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대기업들의 규제 완화 압력을 받고 있다.

독일의 최대 소매업체 사장은 “[규제 완화 대상]

2002년 부시의 독일방문
반대 시위

목록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임금 이외 비용의 분명한 감축, 과다한 사회 복지 제도 개혁, 노동 시장의 유연화”라고 말했다. 슈뢰더는 그가 4년 동안 받아들인 블레어 파 이데올로기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기업들을 달래려 한다.

그리고 그는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싶어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가 내년에 유럽연합 안정화 협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긴축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슈뢰더는 노동조합이나 SPD 지지자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4년 전 슈뢰더가 집권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파 정당들을 놀렸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선거 운동 초반부터 대량 실업과 긴축 정책에 맞선 저항이 터져 나왔다. 건설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파업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더 커다란 저항의 압력은 선거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점이 중요하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다. 독일의 정치적 양극화는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공동 반전 행동

STOP THE WAR ON IRAQ BEFORE IT STARTS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시작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일시: 10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역 광장

주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2003년 세계사회포럼

세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운동의 거대한 집결

2003. 1.23~28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www.foursocialmundial.org.br

비디오

투쟁은 계속된다

2001 제노바

반자본주의 시위의 절정
30만 명이 뒤흔든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
그 생생한 투쟁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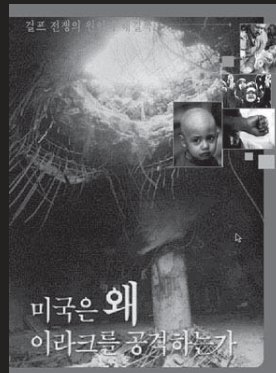


소책자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는가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는가? 미국은 중동에 어떤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랍 민중은 어떻게 미국에 저항했는가? 이 소책자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것이다.

값 1,500원

《아랍은 왜 미국에 분개하는가》
개정 증보판



‘다함께’ 반전 토론회에 다녀와서

10월 11일 ‘다함께’는 김승국 자통협 의장을 초대해 반전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김 의장은 미국의 위선을 공격했다. 또, 조지 W 부시의 일방주의적 패권 전략이 국내외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력한 반전운동이 부시의 이라크 전쟁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김승국 의장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일부 주장에 대해 단서를 달고자 한다.

김 의장은 미국 지배 계급의 분열을 지적하면서, “시장이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시가 전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군수 자본”은 전쟁을 지지하는 반면, “금융 자본”은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럽스펠드가 전자를 대변하는 반면, 후자는 파월이 대변한다는 주장이었다.

럼스펠드와 파월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군수 자본” 대 “빈곤 자본”의 갈등 구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전쟁을 지지하는 쪽과 전쟁을 반대하는 쪽 사이의 갈등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 지배 계급 내부의 분열은 21세기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 전략을 둘러싼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면하고 있는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군비 지출 확대는 미국 경제를 잠시 떠받칠 수는 있어도,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장기 호황 때처럼 세계 경제를 확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 곳에는 군대가 개입해야 한다. 석유 통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다.

“메파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특히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같은 속도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충돌할 수도 있다. 이라크 공격은 단지 미국의 중동 지배를 위협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지배 계급 내 “온건파들”은 미국의 ‘나홀로’ 이라크 공격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면 이란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 전쟁이 아랍 세계의 서방 동맹국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 1991년 걸프 전쟁 때처럼 아랍 정권들과 유럽의 동맹

국들을 포함한 대규모 다국적군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콜린 파월이 군사 행동을 통한 이라크 “정권 교체”라는 “메파들”의 목표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는 좀더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즉,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 아니라 국제 동맹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월 같은 “온건파”가 득세하면 “이라크에 대한 막가파식 공격의 고삐는 느슨해지고, 중동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김 의장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유럽과 일부 아시아 정부 지도자들이 미국의 전쟁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정부 지도자들이 반전 운동의 원칙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전쟁이 정당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 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자신들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 공격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들 나라의 전력만 봐도 알 수 있다.

김 의장도 비판했듯이, 프랑스는 이라크 유전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시의 전쟁을 비판한다. 러시아의 푸틴은 지난해에 체첸인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 “무기 사찰”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국도 이미 지난해에 자기 나름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왔다. 중국은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 민족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대가로 이를 묵인했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분리 독립 운동을 벌이는 무슬림 조직을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 명단”에 올려 놓았다.

독일 총리 슈뢰더는 전쟁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이라크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독일 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들 나라 모두 1991년에 유엔의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또, 지난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지지했다.

물론 기성 권력 체제의 분열은 많은 사람들이 반전 운동에 참가하도록 고무한다. 상충부의 분열은 광범한 사람들이 전쟁 물이에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승국 의장이 각국 정부들이 일관되게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김인식

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밝힌다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김하영 책벌레

이 책은 한반도 전쟁 위기, 김대중 햇볕 정책, 남북한 지배 권력의 관계, 북한 사회의 성격과 지배 이데올로기 등 북한과 관련된 초미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저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하고 묻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전에 쓴 이 글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 격화와 그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예측했다.

저자는 냉전 해체 뒤 불안정해진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냉전 해체 뒤 가속화한 “미국 제국주의 통제력의 위기” 때문에 미국은 잠재적 경쟁국들(중국, 일본)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적 힘을 사용하려 한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이런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점증하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자신의 통제력을 위협할까 봐 걱정이다. 행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하루 빨리 굴복시키고 동아시아에서 힘의 우위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핵사찰 압력은 온갖 위선으로 가득하다.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 생산 능력조차 의심스러운 북한을 두고 핵사찰 압력을 넣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지목한 금창리 핵시설 의혹 현장은 “커다란 빈 동굴 단지”일 뿐이었다.

위선적인 것은 김대중도 마찬가지다. 말로는 남북 화해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남한의 사거리 300킬로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자 남한 정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저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중은 1998년 중순에 노동자 투쟁의 격화 가능성 때문에 정주영의 소떼 방북 후에 벌어진 잠수함 사건을 “북한 위협 카드”로 써먹었다.

한편 대북 관계의 전략적 이용조차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정세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김대중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남북정상회담조차 “제국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열강들 간의 세력 균형”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모순이 작용한다. 일본의 TMD 가입으로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간의 세력 균형이 형성됐지만, 이는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군비 경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향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불안정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저자는 대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게 김대중만의 수법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역대 남북한 지배자들은 자신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그것도 겉으로는 적대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서로서로 도왔다.



화해 제스처(“온풍”)와 강경 대응(“냉풍”) 모두 필요했다. 예컨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남한에선 유신 체제를, 북한에선 주석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됐다. 판문점 총격 사건은 남북한 지배자들이 서로 한통속이라는 걸 극명히 드러냈다.

이쯤 되면 저자가 남북한 지배자들 모두에게 아무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한의 친북 좌파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모종의 환상 때문에 김정일의 협상 파트너인 김대중에게까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는 것이 남북한 지배자 모두에게서 독립적일 수 있는 길이다.

저자는 통념과 달리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통념상 사회주의는 국유화와 동일시됐다. 그러나 특정한 소유 형식으로 사회 성격을 판단할 수 없다. 이미 엥겔스는 비스마르크의 국유화를 두고 “가짜 사회주의”라 비판한 바 있다. 국유화를 사회주의라 한다면 후진국에서 급속한 공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생산수단과 자원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구실을 담당하는 것도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과연 박정희도 사회주의자인가?

자본주의에서 자본 집중 경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일국 내의 경쟁을 제거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국제적 규모의 경제·군사 경쟁 체제에 얼마든지 속할 수 있다. 북한 경제야말로 이런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간 경쟁

체제에 종속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군사 경쟁 필요 때문에 관료들은 국유화와 계획 경제로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때 주체 사상은 급속한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대중 동원 이데올로기 구실을 톡톡히 했다.

북한 사회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가 무엇을 동기로 해 운영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은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노동자들은 생산의 계획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해방 뒤 꾸준히 성장한 관료들이 농업집산

화를 통해 농촌으로부터 노동력을 이동시킨 뒤,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게다가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북한은 공업화 과정에서 대중의 소비에 필요한 물자 생산은 계속 줄어 나가면서, 생산수단에 대한 생산은 계속 늘었다. 이는 북한 경제체제가 대중의 필요보다는 축적 동기에 의한 생산이 지배한 것임을 보여 준다.

저자의 결론은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집합적으로 착취하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북한도 엄연히

계급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남한 좌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탈북자들을 과연 “사회부적응자”로 봐야 할까? 북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 1989년 천안문 항쟁 때 중국 지배자들이 그랬듯이 김정일이 ‘사회주의’에 반기를 든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것을 지지할 것인가? 남북 민중의 이익을 위한 통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 책은 한반도 변혁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질문들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는 빼어난 실천지침서다.

정병호

마르크스 평전 프랜시스 윈, 푸른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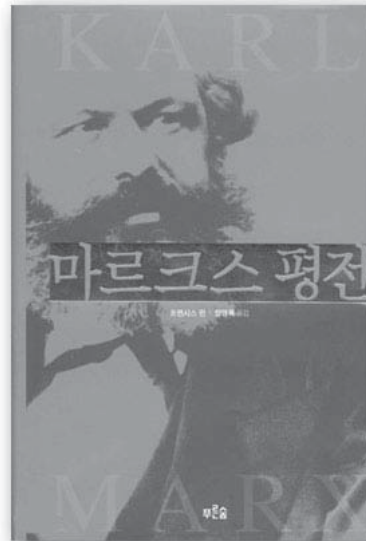
“너는 이마에 머리카락과 턱수염이 새까맣고 검은 눈이 번쩍거리는, 이 약간 땅딸막한 남자는 즉시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학식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청년 마르크스를 묘사하는 이 말은 적절해 보인다.

마르크스와 안면이 있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묘사했다. “트리어 출신의 카를 마르크스는 24살의 유력한 인물이다. 그의 뺨, 팔, 코, 귀에서는 술 많은 털이 뽁뽁하게 솟아 있다. 그는 오만하고, 충동적이며, 정열적이고, 한없는 자신감에 차 있다.”

마르크스는 보통 혁명에 미친 정신병자나 아니면 전 생애를 대영박물관에서 보낸 딱딱한 학자로 그려지곤 한다. 물론 어느 쪽도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만 그는 정열적인 정치 활동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는 1848년 민주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선동 때문에 가는 나라마다 추방당했다. 프로이센 정부가 마르크스가 편집하던 신문을 폐간하자 그는 저항하는 뜻에서 붉은 잉크로 인쇄한 신문의 마지막 호를 다음과 같이 장식



하면서 끝마쳤다. “언제 어디를 가나 마지막 말은 노동계급의 해방이 될 것이다!”

1848년 혁명의 패배는 전 유럽의 노동계급에게 영향을 미친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암울하던 1850년대에 마르크스는 정치 활동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60년대에 급진적인 정치가 부활하자 그는 다시 활동으로 복귀했다.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의 결성은 열정적인 활동기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다. 1871년 파리코뮌이 패배한 뒤 제1인터내셔널이 해체될 때까지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의 핵심 인물이었다.

마르크스는 ‘위선, 무지, 천박한 독단’과

‘아침과 아부’를 혐오했다. 그는 “몽둥이가 아니라 바늘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것에 좌절했다. 마르크스는 자녀들과 응답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싸우는 것이고 불행이란 굴복하는 것이며 가장 혐오하는 악덕은 노예 근성이라고 대답했다.

프랜시스 윈은 <가디언>의 칼럼니스트로 유명하다. 그는 이 칼럼에서 자주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의 지도적 인물들을 비판하곤 했다. 불행히도 1999년에 그는 발칸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 반대자들을 비난하는 칼럼을 썼다.

그럼에도 윈이 쓴 마르크스 전기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재미도 있다. 이 책에서 윈은 <공산당 선언>의 선견지명을 칭찬한다. 그는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 파리 코뮌을 다룬 팜플렛 —을 “마르크스의 가장 매혹적인 저작 중 하나”로 묘사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금도 마르크스가 옳다고 인정한다. “마르크스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는 나에게 놀라울 만큼 현대적인 화두로 다가왔다. 오늘날 자신이 현대적 사상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나 정치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화’라는 유행어를 입에 올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르크스가 이미 1848년에 세계화를 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마르크스의 경제 분석을 거부하는 이들

에게 원은 “20세기 서구 경제의 호황-불황 주기들”과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으로 응수한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와 마르크스 비판가들에게 “끊임없이 탐구해 들어가는, 섬세하고 비교적인 정신이 드러나는” 《파리 원고》를 읽어보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원의 설명은 별로다. 원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너무 자주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마르크스가 헤겔에게서 발전시킨 변증법을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발가벗겨진 하나의 관념(正)은 자신과 반대되는 관념(反)을 열정적으로 끌어안고, 거기에서 종합(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시 새로운 명제가 되어, 새로운 악마-연인의 유혹을 받는다. 두 개의 그릇된 것이 합쳐져 하나의 올바른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올바른 것은 태어난 직후 다시 그릇된 것이 되고, 이것은 자신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내밀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우스꽝스런 설명 방식은 원이 소외를 다룬 마르크스의 저작을 설명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 책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의 생산물을 박탈당하는 과정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원의 손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똑똑한 닭(이런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지만)이 수십 개의 알을 낳은 뒤 온기가 식기도 전에 탈취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산력이 가장 풍부할 때 자신의 무능을 가장 크게 의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원은 《자본》을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맞서 《자본》을 방어하지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동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생각은 거부한다. 오히려 그는 《자본》을 “주인공이 자신이 창조한 괴물의 노예가 돼 결국 그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펠로 드 라마나 방대한 고딕 소설”로 묘사한다.

따라서 원이 묘사하는 마르크스의 생애와 그의 사상 발전은 서로 분리된다. 원은 마르크스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를 비아냥대거나, 정치적 주장들을 진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마르크스와 연관된 조직과 개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심지어 그는 마르크스를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조직이나 기구를 싫어하던”, “변태적인 지식인 무리 중 하나”로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은 늙은 무어인(마르크스의 별명)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원이 묘사한 마르크스의 모습은 대부분 다른 전기들에 나오는 모습과 일치한다. 예컨대, 마르크스의 막내 딸 엘레아노르를 다룬 이본 캅(Yvonne Kapp)의 책 제1권이 그렇다.

원은 토텐햄 코트 거리를 따라 진행된 마르크스의 유명한 술잔치를 존경스럽게 묘사한다. 마르크스는 “옥스포드 거리에서 햄스테드 거리까지 모든 술집에서 적어도 한 잔씩 맥주를 마시려고” 했다. 한 번은 마르크스가 길거리의 수많은 가로등을 돌로 깨뜨렸다. 화가 난 젊은 순경이 쫓아오자 마르크스는 쥘싸게 도망쳤다. 이것은 많은 동지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익숙한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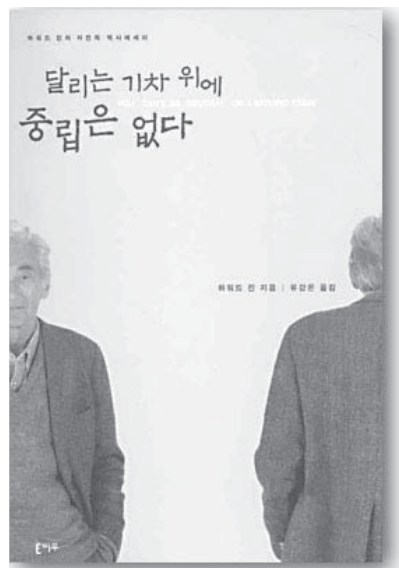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하워드 진 이후

보스턴 대학의 역사학 교수 하워드 진은 교과서와 주류 언론이 감추려고 하는 역사적 진실들을 들춰내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산산조각 내는 좌파 지식인이다. 특히 1980년에 처음 출판한 《미국 민중 저항사》에서 그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저지른 잔학 행위를 신랄하게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글쓰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인종 차별, 전쟁, 빈곤 같은 불의에 맞서 싸워 온 거리의 투사이기도 하다. 여든이 넘는 고령이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시의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반전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 책의 제목은 원제 《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객관성(혹은 중립성)을 가장하지 말



자”는 저자의 신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표지에도 나오듯이 이 책은 저자의 ‘자전적 역사 에세이’다. 미국 현대사에서 수많은 격동의 순간들을 현장에서 체험한 그에게는 자서전이 곧 역사 에세이도 될 수 있나 보다.

1부 ‘남부와 운동’은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1950년대 남부의 흑인 민권 운동에 연루한 경험을 다룬다. 당시 남부의 흑인들은 공공 건물, 대중 교통, 식당 등에서 격리당했다. 또, 유권자 등록 절차상의 차별 때문에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러한 불평등에 어떻게든 저항하는 사람들은 성난 백인 군중과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에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 저자는 남부의 상황을 결정적으로 바꾼 커다란 사건들의 배후에는 이처럼 수많은 개별적인 행동들이 숨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2부 ‘전쟁과 평화’는 제2차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파시즘을 격렬히 증오한 하워드 진은 폭격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훗날

원폭 피해자들의 참상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유럽 도시의 주민들이 경험한 생지옥을 알고 나서 제2차세계대전의 정당성에 심각한 회의를 품게 된다. 고민 끝에 그는 제2차세계대전을 포함한 모든 현대 전쟁은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할지라도 본질상 부도덕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저자는 베트남 전쟁이 터지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쟁 반대를 주장했다. 이 장에서는 1965년 보스턴 공원에서 1백 명도 채 안 되는 초라한 규모로 처음 열린 반전 집회가 몇 년 뒤에는 10만 명 규모로 성장한 얘기들을 들려준다.

3부 '풍경과 변화'의 첫 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의 법정 투쟁 사례를 통해 사법 체제의 비민주성과 부조리를 폭로한다. 뒷부분에는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난 저자의 성장기, 공산당원 친구들, 처음 참가한 시위 경험, 군입대 전 브루클린 조전소에서 노동자로 일한 경험, 보스턴대학 교수 시절 권위주의적인 대학 당국과 겪은 갈등 등의 얘기가 나온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세계 정세가 우울하더라도(이 책은 반자본주의 운동이 탄생하기 전인 1994년에 썼다)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역사는 거대한 적과 맞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워 승리한 사람들의 얼굴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비록 "충분히 많은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백래웅

벽을 그린 남자 — 디에고 리베라 마이클 곤잘레스, 책갈피

나 는 미술대학에서 '거대 담론'은 무너지고 마르크스주의처럼 인류 역사 전체를 단일한 유형으로 엮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주장을 들으며 보냈다. 예술은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말이다.



품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평한 보기드문 책이다. 이 책은 영국의 출판사 레드위즈의 '혁명적 예술가' 시리즈 제1차분 제1권으로서 예술과 혁명이라는 '거대 담론'을 설명한다.

사회가 중대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이에 응답하는 예술이 탄생했다. 1936년 스페인, 1970년 칠레, 1975년 포르투갈, 1917년 러시아, 그 중 특히 러시아 혁명은 예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세계 미술사에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대중 예술 운동은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 디에고 리베라 이 세명이 주도하고 확립한 멕시코 벽화 운동일 것이다.

멕시코의 '해외 자본 현지 대리인' (주로 중간계급)들은 유럽 부르주아지와 문화적으로 통합되길 열망했고 멕시코는 파리의 문화를 흉내내며 자라났다. 이런 멕시코에서 벽화 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멕시코 혁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1년 디아스의 30년 독재가 무너지고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1920년 4월 오브레콘이 옛 지배계급의 잔해를 짓밟고 새로운 민중 연합의 지도자로 등장했다. 그러나 오브레콘 정부는 민중의 필요와 요구를 무시하고 잔혹한 탄압을 민중주의적 수사 속에 은폐했다. 멕시코 혁명은 '동결된 혁명'으로 끝났다.

대중 단결이라는 수사와 함께 오브레콘이 권좌에 올랐지만 갈등과 분쟁은 여전히 지속했다. 사회 통합이 긴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멕시코 민중에게 국가라는 제단에 안치된 신념, 공통의 가치 체계, 공유된 이데올로기를 주

최 근에 출판된 《벽을 그린 남자 — 디에고 리베라》는 예술가와 그의 작

입했다. 이 새로운 정부는 민족 문화 재창조를 위해 예술가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벽화 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예술가들은 정부가 바라고 기대한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를 더 급진적인 전망과 연결한 것이다. 1922년 오로스코 시케이로스, 리베라 등은 선언문에서 '거드름 피우는 지식인 사회가 선호한 모든 형태의 예술을 귀족적'이라며 거부하고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일치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1923년 정부는 노골적 선전으로 나아가고 있던 오로스코와 시케이로스의 벽화를 거부했다. 리베라만이 독점적 제작자로 남았다.

리베라는 인디오, 고통, 억압, 민족에 대한 이상화한 표현을 통해 그 자신만의 멕시코 미술을 완성해 갔다. "그의 작품은 여전히 혁명의 제분소를 가동시키는 원료로 남을 것이다."

그의 위대한 벽화들은 여전히 우리들을 열광시키고 유쾌하게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매료당한다. 그렇지만 바로 그 힘이 변조돼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리베라의 그림은 우리를 갈등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게 한다. 그의 벽화에 등장하는 대중은 언제나 방관자로 남아 역사의 과정을 기다리는 수동적 인물이다. 영웅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순교자처럼 그들은 기다리는 대중을 대신해 행동하며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헌신한다.

망명한 트로츠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일화로 리베라(공산당원이기도 했다.)는 예술가이자 공산주의자로 높이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리베라의 대리주의를 보면 리베라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트로츠키의 확고한 신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편에서 리베라에 대한 지독한 무관심과 — 이 나라에서 거의 소개된 적이 없다 — 다른 한편에서 공산주의자로 과장된 평가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평가를 벗어난 곤잘레스의 비평은 이 책이 돋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리베라의 작품들은 보편적 진리의 상징들을 이용해 부르주아 민족 국가의 일시적 지배를 또 다른 영원한 진리로 바꾸어버렸다. 그의 그림에는 모순이나 역설이 빠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가 계급과 대면하는 모든 노동자가 겪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다. ... 멕시코에선 아직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투사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지배계급이 혁명의 상징과 혁명가 사파타의 얼굴을 이용하고 있다.”

여지연

21세기 십자군 전쟁 라울 마하잔 미토

21세기 시작은 9·11이라고 얘기할 만큼 9·11은 세계 정세를 바꿔 놓았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 삼아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했다.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도 미국과 비슷하게 행동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둔 미국은 이제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한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21세기 십자군 전쟁》의 저자 라울 마하잔은 미국의 반전 활동가이자 녹색당 당원이다. 그는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 텍사스 주지사로서 출마해 전쟁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퍼부은 폭탄에 죽은 사람은 9·11 테러로 죽은 사람보다 많다.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을 숨겨 주는 나라를 적국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숨겨 주고 있다. 유니언 카바이드사 인도 지사장을 지낸 워렌 앤더슨은 1만 5천 명을 청산가리 증독에 빠뜨려 죽음으로 내몰았다. 인도 정부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쟁과 테러를 지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헨리 키신저는 미국

에서 원로 정치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를 보면 키신저는 동티모르인 25만 명을 학살한 인종 말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게 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아이티 암살대 에마누엘 콩스탕, 우익 반카스트로 쿠바인 등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숨겨 주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지금은 ‘서반구안보협력학교’라 불리는 미주 군사 학교를 만들어 테러, 암살 고문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로베르토 드브루송 같은 끔찍한 학살자나 독재자가 됐다.

‘인도주의를 위한 전쟁’이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적십자 기지를 두 번이나 폭격했고, 전기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카자키 댐 근처를 계속 폭격했다. 아프가니스탄은 3년째 가뭄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부시는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찾아줄 것처럼 말했다. 그는 위선적이게도 이라크 민중에게 후세인에 맞선 봉기를 호소했다. 그런데 정작 북부 쿠르족과 남부 이슬람교도들이 1991년 제2차 걸프전 끝 무렵에 봉기를 일으켜 도시 몇 개를 해방시키자 미국은 폭격을 중단하고 후세인이 반란을 진압하게 용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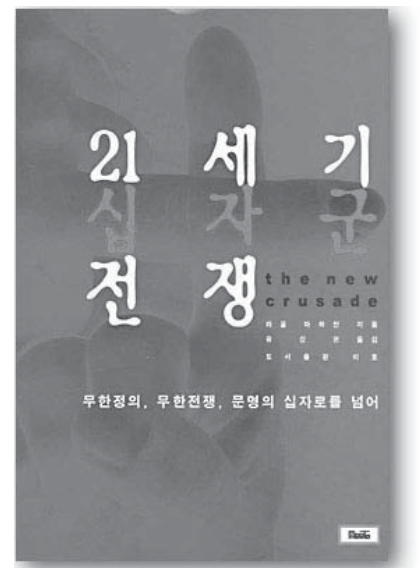
서방 언론들은 부시가 벌이는 전쟁을 더러운 거짓말을 하며 도왔다. <L.A. 타임스>는 2001년 11월 24일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수십 명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 죽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은 가장 적게 잡은 통계가 3천 명이다. <뉴욕 타임스>는 경찰조차 7천 명이라고 말한 반전 집회를 수백 명이라고 보도했다. CNN 월터 아이잭슨은 직원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의 사상자나 곤경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뒤떨려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9월 11일 후 미국에는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쳤다. 전쟁에 반대한 칼럼리스트들은 해고당했고 살해 위협을 받았다. 많은 무슬림들이 보복 공격을 받았다. 미국인들이 단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단결’은 순전히 미국의 정치인들과 사장들을 위한 것이었다. 9·11 테

러로 항공사들은 일시적 손해를 보았다. 그것을 핑계로 사장들은 노동자 14만 명을 해고했다. 항공사들은 급박한 상황에 퇴직금이나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호기’를 놓치지 않았다.

인권도 계속 후퇴했다. 작년 10월 26일 미국에서는 애국법이 제정됐다. 애국법은 정보 기관이 ‘자유롭게’ 도청할 수 있는 권



한을 허용하고 있다. 9·11 사태 뒤 법무부는 테러를 저질렀거나 혹은 저지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1천2백명 이상을 무기한 구금했다. 법무부는 이 사람들이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할 수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 정부는 9·11 사건을 계기로 고문 합법화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미국이 벌이려는 이라크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세계는 야만으로 빠져들 것이다. 미국의 벌이는 전쟁에 맞선 반전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 책은 미국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늘어놓는 거짓말들을 통쾌하게 반박하고 있다. 또 반전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알아야 할 풍부한 사실들이 적혀 있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 미국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버팀목이라는 지적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잘 말해 준다. 반전 운동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승영

동맹 속의 섹스 캐서린 문, 삼인

2000년 3월, 68세의 기지촌 여성 서정만 씨가 온몸이 멍이 들고 갈비뼈가 모두 부서진 시체로 발견됐다. 당시 상황을 회고한 한 활동가는 “죽음보다 끔찍한 것은 화려하게 매니큐어가 칠해진 그녀의 긴 손톱”이었다며, “칠십이 다 되어 가도록 매춘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녀의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고 애통해 했다.

캐서린 문의 《동맹 속의 섹스》는 한미 행정협정 합동 회의록·미국 국무부 문서·주한미군의 각종 파일 등을 근거로 서정만 씨와 같은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희생시켜 주한 미군, 남한 정부, 지역 기지촌 권력자들이 어떻게 각자의 이익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저자는 성매매가 캠페인으로 근절할 수 있는 ‘문화’라기보다는 특정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창출되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매매춘을 필요악이라 간주하는) 문화보다는 … 국가 안보, 경제 발전을 여성의 사회복지 … 보다 우선시하는 남한 정부의 우선 순위가 매매춘과 관련한 정책들을 결정했다.”

1백만 명의 한국 여성들은 전후 빈곤 때문에 미군에게 성을 팔았다. 서울에 사는 18세~40세 여성의 60퍼센트가 실업 상태이던 1965년, 용산 미8군을 대상으로 성을 판 여성 1백5명 모두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의 치료비나 형제의 교육비가 절실했다. “그들에게 기지촌은 생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1971년 출범한 ‘기지촌정화위원회’는 그들의 성매매를 ‘민간의교관’의 ‘애국적 서비스’라 부르며, 더욱 ‘청결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인종 문제와性病 증가 때문에 출범하게 된 ‘기지촌정화위원회’는 ‘미군이 주둔하기에 안전한 한국’을 증명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정화’했다.

저자는 너스레(1969년,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

다고 발표한 선언)이 실현돼 미군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 한 남한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의 통제를 강화했음을 밝힌다.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안보의 위협을 강조했지만, “국가안보가 위기 상태에 있다고 강조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정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다. 저자가 “인터뷰한 (기지촌) 여성들 모두 정부에게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



한 보호가 아니라 클럽 업주, 지역 한국 경찰… 미군 기지의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보호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매춘에서 벗어나려고 달아난 여성을 감금하곤 업주에게 연락해 ‘되돌려주었다.’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희생시켜 왔는지에 대한 저자의 폭로는 생생하다. 그러나 저자의 폭로는 일관되지 않다. 저자는 박정희가 당시 “(최소한) 어린 소녀들을 매매춘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정희가 직접 깊숙이 개입했던 시기에도, 등록된 여성 3만 6천 9백 24명 중 7천 6백 69명이 15~19세의 소녀들이었다. 게다가 성매매의 원인인 저임금·가난에 맞서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자가 바로 박정희다.

“한때 극렬한 좌파적 시각으로 비판받던 반미주의가 지금 한국 운동의 주류가 아닌 가 우려된다” (<주간한국>, 2001년 5월 15

일치) 하고 말한 저자 캐서린 문은 주한 미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는 주한 미군이 “남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방위하고 증진시키는 문제를 타협할 수 없는 우선 순위로 여겼”으며, “한국인들을 많이 좋아하고 존경”해서 한국 주둔을 유지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미군 범죄마다 한국인들의 피해를 일관되게 무시한 주체는 주한미군이다.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한 주한미군 분담금은 4억 4천만 달러(약 5천 7백억 원)이다. 이 돈이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쓰이면 서정만 씨와 같은 불행한 사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민희

광고와 대중 소비 문화 스튜어트 유엔, 나남

1997년에 우리 나라 광고 시장의 규모는 약 5조 3천 7백 69억 원이었다. 하루 평균 자그마치 1백 47억 원이 광고비에 쓰인 셈이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1997년은 IMF 위기로 기업이 대량 해고 계획을 쏟아내던 때였다.

광고비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교육 의료 서비스 개선에 쓰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광고는 기업주들에게는 전혀 낭비가 아닐 뿐더러 없어서는 안 될 장치다. 이 책 《광고와 대중 소비 사회》는 광고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1920년대 미국의 상황을 통해 왜 기업주들이 그토록 광고에 집착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의 장점은 광고를 주제로 한 수많은 책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물음들을 제기하는데 있다.

광고는 왜 생겼는가? 광고는 소비자에게 유용한가?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광고는 진실인가? 광고는 중립적인가?

저자는 광고를 산업 사회(자본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파헤치는 올바른 분석틀을 사용해 이 문제들에 답한다.

1부 ‘광고는 사회적 산물’에서 저자는 대

량 생산이 정착되고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량 소비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가 전면에 부상했다고 말한다.

2부 '소비의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저자는 광고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데 주요 수단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광고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초기의 목적을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활 속으로 확장돼 소비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다. 광고는 대중의식의 조작 수단으로, 즉 정치 '선전' 수단으로 이용됐다.

특히 저자가 광고와 노동자 통제를 연결시켜 광고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신선했다. 저자는 "모든 산업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 즉 피고용인을 다루는 문제"라는 기업주들의 고민에 착목하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전후적인 미국 노동 운동으로 골머리를 썩던 기업주들은 새로운 사회 통제 수단이 필요했다.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의식에 도전하고 기업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산업 사회의 규율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즉 광고는 "파괴자인 동시에 창조자"로서 기업주들에 의해 고안됐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데 비교적 수월했던 유럽에 비해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광고는 사상의 동질화를 통해 전 국민의 동질화에 크게 기여했다." 기업주들은 미국 사회의 수많은 이주자와 이민 1세대를 향해 광고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능이 "불세비즘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광고"라고 단정하고는 광고를 미국화를 위한 기본 과정의 하나로 봤다.

저자는 광고의 가장 큰 기능이 사람들의 소망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고는 생산 현장에서 겪는 좌절감, 사회 생활에서 불안감을 겪는 노동자에게 '욕구'를 부추기고 시장에서의 소비 '습관'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기업주들은 사회심리학자들을 고용해 소비에 저항하는 태도를 없애는 방안을 연구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현



대 상업 PR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모든 사람은 기계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여론을 조종할 수 있는 '대중심리학'의 실행을 주창했다. 이 사회심리학자들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근시안적" 관심을 갖게 해 겉으로 "품나는" 것들을 소비하도록 만든다.

이 심리학자들은 "주어진 상황에 간혀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겪는 좌절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좌절감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면 위험하지만 소비가 이를 승화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나 직업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옷에 라인 하나쯤 넣는 것이 구원이 될 때도 있다." 우리는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답답함을 풀어보려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소비 이데올로기는 사회 통제와 상품 유통의 필요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했다. "소비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탄생했다. 소비주의는...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소비주의의 핵심은 노동자와 대중을 단순히 노동자 또는 생산자로만 보지 않고 소비자로 간주한다."

생산 영역에서 모든 통제권을 박탈당한 노동자 소비자가 소비 영역에서 소비자 주권을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국 소비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다. 소비자 운동의 핵심 약점은 기업주들이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주입하려는 생각, 즉 생산 영역과 소

비 영역의 철저한 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미국 노동 운동이 반자본주의적 성격에서 체제 내 개량으로 나아간 것이 기업주들이 이 시기 광고를 통해 전개한 끈질긴 이데올로기 캠페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암시한다.

"노동 현장 내의 현실은 소비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행복의 느낌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광고의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현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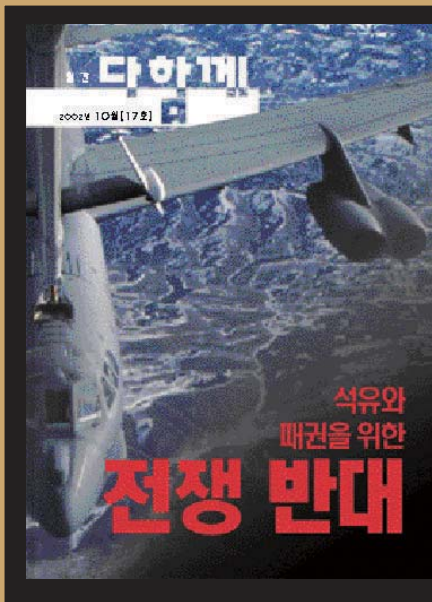
한 노련한 카피 라이터는 이렇게 충고한다. "어떤 제품을 광고하게 되더라도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은 절대 보지 말라... 일하고 있는 사람도 보지 말라...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내부의 진실을 알고 나면 막상 제품의 판매를 결정하는 제품의 특성에 대해 아무것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1920년대 소비경제학 분야에서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자 상품이 직접적인 사용에서 파생되는 가치보다는 "정치화된" 가치 개념이 광고를 통해 조장됐다. 광고에서 직원이 "사장님, 파이프 담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함으로써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파이프 담배를 애용하며, 소비자가 이 파이프 담배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사람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조장한다.

산업이 정해 놓은 소비 규범 중 하나인 패션 유행에 따르기를 거부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고집을 피운다면...직업이 있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영업 사원이려면 고객을 놓치게 될 것이고, 정치가라면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게 될 것이다. 의사와 변호사라면 환자나 의뢰인이 줄어들 것이다. 그는 모든 친구를 잃을 것이다." 하고 말이다.

광고는 돈 있는 사람의 소비를 부추기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광고는 산업 사회에서 불만을 품을 소지가 있는 곳은 모두 도려내어 기업의 체계모니터에 위협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그 불만을 전가시켰다."

조박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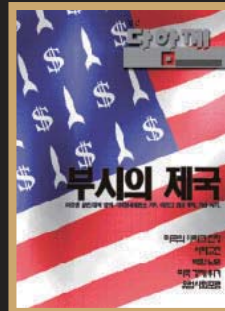
17호(2002.10)

- 병원파업
- 부시의 이라크 전쟁
- 유엔이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 후세인은 누구인가
- 마흐메트 평전
- 병역비리 · 수해
- 한총련의 반이화장 운동
- 유시민의 노동현 지키기
- 노무현 토론회
- 정몽준의 감춰진 본질
- 조 · 일 정상회담
- 분단의 정치와 노동자운동
- 독일총선
- 문부식 비판
- 인민전선
- 석유와 서방 제국주의



16호(2002.9)

- 남한 지배자들의 친미주의
-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
- 9 · 11주년
- 이윤 불이예희생당하는 지구
- 폴 머커의 <녹색은 적색이다> 서평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논쟁
- 농민은누구인가
- 북한의시장 개혁
- 브라질경제 위기



15호(2002.8)

-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
- 미국식 기업 모델의 파산
- 미국 경제는 추락하는가?
- 플랜 콜롬비아
- 정몽준 비판
- 노무현의 좌충우돌
- 서해교전
-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
- 세계사회포럼
- 아르헨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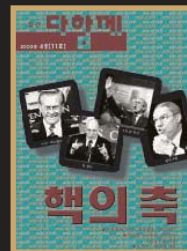
14호(2002.7)

- 지방 선거 결과
- 서총련 투표 전술비판
- 북한난민의 환영받지 못한탈출
- 이주 노동자는 노예가아니다
- 유럽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 1987년 7~9월노동자 대투쟁 15주년
- 인도-파키스탄 핵전쟁 위기
- 반란의 아르헨티나



13호(2002.6)

- 프랑스 대선
- 반파시즘 투쟁
- 트로츠키는 누구였는가
- 월드컵 제대로 보기
-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 네덜란드-죽은 당수가 부활했다?
-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코이즈미



11호(2002.4)

- 손석춘 강연
- 누가 핵 미지팡이인가
- 미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인가
- 철도 파업 평가
- 이스라엘의 테러
- 인도 '종교분쟁'
- 이탈리아 노동자투쟁



9호(2002. 2)

- 아르헨티나
-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 인도-파키스탄 전쟁
- 월드컵과 정치
- 권영길의 2002년 선거전망
- 주5일 근무제
- 정성진의 경제 전망



10호(2002. 3)

-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
- 파이트 부르디의 조사
- 과학과 이데올로기
- 세계화와 여성노동자
- 포르투 알레그레
- 엔른 스펀들
- 아르헨티나 노동자 저항
- 박토르 위고



8호(2002. 1)

- 아프가니스탄 여성
- 보신탄 논란
- 인간배아 복제
- 백색공포?
- 스포츠
- 강준관 논쟁
- 브뤼셀 EU정상회담



7호(2001. 12)

-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
- 인에드워드 사이드
- 오늘의제국주의와전쟁
- 노무현 비판
- 수전조지의 WTO비판
- 마약합법화
- 안락사 · 낙태 · 대리모



6호(2001. 11)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 홍근수/이마드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 의반전 성명서
- 유엔 · 이슬람
- 유대 시오니즘의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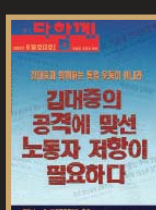
5호(2001. 10)

-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것이다
-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전쟁
- 김수환 교수 강연



4호(2001. 9)

- 제노바 G8회담 반대 시위
- 가톨릭 급진 주의는 죽었는가?
- 소련 붕괴 10주년
- 매가와 티의불안한 앞날



3호(2001. 8)

-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 민주노동당 상반된 파업 평가
- 지구 은난화와 자본주의
- '8 · 15민중 공동행사'를 비판한다
- 매매존 합법화



2호(2001. 7)

- 서울대 개혁 논란
- 안락사 합법화 논쟁
- 6 · 15선언 1년을 돌아보다
- 새만금 간척 사업이 가져올 결과들
- 민족과 계급



1호(2001. 5)

- 미친 스타 워즈 계획
- 부시의 환경 파괴
- 미스코리아측전
- 경찰의 폭력
- 일본



〈다함께〉는 기업 광고 협찬을 일체 받지 않으며 구독료도 운영·발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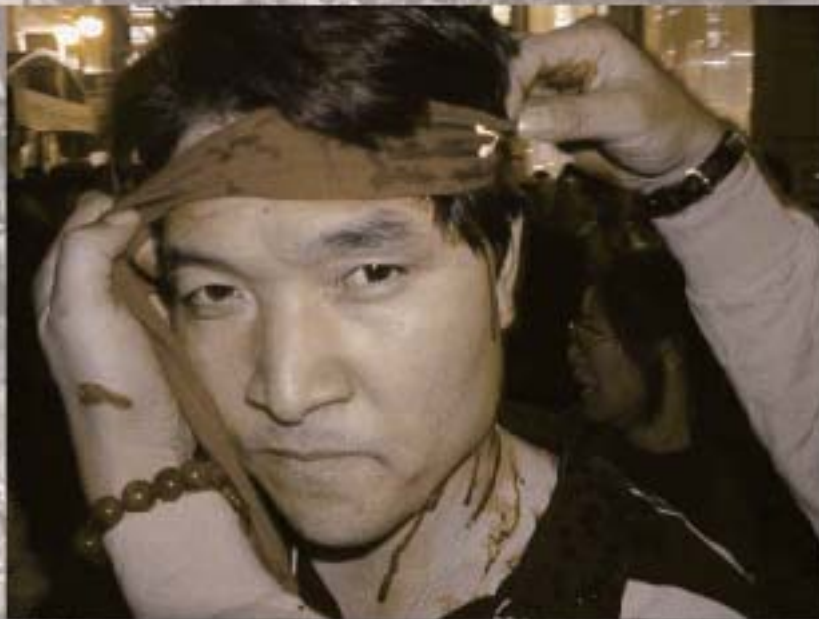


사진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공)

10월 17일 김대중 정부의 경찰이 노동조합 권리를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구타하고 1백여 명을 연행해 갔다.

2,500원